

통일환경 및 남북한관계 전망: 2011~2012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통일환경 및 남북한관계 전망:
2011~2012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통일환경 및 남북한관계 전망: 2011~2012

인 쇄 2011년 12월
발 행 2011년 12월
발 행 처 통일연구원
발 행 인 통일연구원장
편 집 인 북한연구센터
등 록 제2-02361호 (97.4.23)
주 소 (142-728) 서울시 강북구 한천로 1307(수유동) 통일연구원
전 화 (대표) 900-4300
(직통) 901-2528
(팩시밀리) 901-2546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기획·디자인 (주) 늘품플러스 (070-7090-1177)
인 쇄 처 (주) 현대아트컴
가 격 6,000원

ISBN 978-89-8479-652-2 93340

© 통일연구원, 2011

통일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 정부간행물판매센터:
·매장: 734-6818 ·사무실: 394-0337

통일환경 및 남북한관계 전망:
2011~2012



목 차

I. 동북아정세	1
1. 동북아 안보정세	3
2. 북핵문제	12
3. 한국의 대외관계	15
가. 한·미관계	15
나. 한·중관계	18
다. 한·일관계	20
라. 한·러관계	23
II. 북한정세	29
1. 대내정세	31
가. 정치동향	31
나. 경제동향	34
다. 사회동향	39
라. 군사동향	43
2. 대외관계	50
가. 미·북관계	50
나. 북·중관계	53

다. 북·일관계	56
라. 북·러관계	58
3. 대남동향	64

Ⅲ. 남북한관계

1. 남북대화	71
2. 남북교류협력	74
가. 경제분야	74
나. 사회·문화교류분야	77
3. 인도주의 사안	80
가. 북한인권분야	80
나. 대북지원 및 북한이탈주민문제	84
다. 이산가족문제	87

부록: 2011년 주요 사건일지	91
-------------------------	----

I

동북아정세 ...



1. 동북아 안보정세

과거 동북아 국제정세는 역내 국가 간 군사·안보적 측면의 대립·갈등, 경제적 측면의 협력·공조의 이중성을 내포하면서 기본구조를 형성하였다. 그러나 2010년도는 동북아 역내 국가들이 금융위기 극복차원의 협조 분위기에서 탈피하여 군사안보적 대립이 치닫는 등 21세기에 들어와 가장 대립과 갈등이 고조된 한 해였다. 2011년 전반기에는 2010년 각종 현안에서 첨예한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악화되었던 미·중 관계가 부분적으로 개선됨으로써 동북아 정세가 상당히 호전되었다. 2010년 미·중 간 세력경쟁, 역내 국가들 간의 외교안보적 대립 등으로 악화일로를 걷던 동북아 정세를 안정시키고자 미국과 중국 양국의 오바마 대통령과 후진타오 주석은 1월 19일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협력적 파트너십, 대만 문제, 한반도 문제, 글로벌 이슈 등에 관해 논의하고, 총 41개항의 공동성명을 채택하였다.

미국은 동아시아 전략 환경에서 한·미·일 대 중·북·러의 신냉전 대결구도가 형성되는 것을 방지하고 동북아 질서의 현상유지를 위해 중국과의 관계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였다. 중국 역시 북한의 편중적 태도, 남중국해 및 동중국해에서의 역내 국가들과의 영토 분쟁 등 자국의 공세적 외교정책에 의해 촉발된 ‘중국 위협론’을 불식시키기 위해, 대국굴기보다 평화발전을 표방하는 도광양희(韜光養晦)로 회귀하고자 했다. 정상회담 후 양국은 미·중관계의 안정적 관리를 목표로 미·중 전략 경제대화(5월), 아·태 사무협상(6월), 바이든 미국 부통령의 방중(8월) 등 다양한 대화와 협상 채널을 가동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동아시아의 안보 질서는 청산되지

못한 과거의 역사적 유산, 지역안보질서를 뒤흔들 수 있는 대만·북한 문제, 그리고 미래 동아시아 주도권을 놓고 벌이는 미·중 간 세력경쟁 등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유동적이고 불안정한 면을 보일 수밖에 없다. 또한 2008년부터 진행되어 오는 세계경제위기로 인하여 미·중 간 세력전이가 예상보다 빨리 발생하면서 19세기 말 세계 제1의 경제 강대국으로 등장한 미국은 독일 나치, 일본 군국주의, 소련 공산주의의 도전을 물리쳤으나, 연 9% 전후 고도성장을 하는 중국의 강력한 도전 에 직면하고 있다. 중국은 급속한 경제력 증강을 토대로 군비 확장을 추진하고 있으며, 북핵문제에서도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동남아시아에 대해서도 매력 공세를 실시하고 있는 등 중국은 영향력과 파워에서 미국의 새로운 세계적 라이벌로 등장하고 있다.

중국의 부상에 따른 세력 전이가 발생되고 세계경제위기로 인해 국제경제구조가 영합계입식으로 변해감에 따라 2011년 하반기 미국 오바마 행정부는 중국의 부상을 전방위적으로 견제하기 위하여 ‘아시아로의 귀환’을 선언하고 그 구체적 전략을 실행에 옮기고 있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11월 하와이, 호주, 인도네시아 방문을 통해 미국이 아시아를 중시하고 지도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것이라는 강력한 의지를 과시하였다. 이번 순방의 핵심은 2011년 10월 힐러리 클린턴 미국무장관이 『포린 폴리시(Foreign Policy)』에 기고한 ‘미국의 태평양 세기(America’s Pacific Century)’라는 글에 잘 제시되어 있다. 2010년 1월 이래 수차례의 연설을 통해서 클린턴 국무장관은 아시아에서 미국의 물리적 능력이 상대적으로 쇠퇴하는 가운데 지도력 유지 방책으로 지역 아키텍처란 개념을 활용하여 지역질서를 재건축하고자 노력해왔다. 여기서 두 가지 기본 축은 동맹과 FTA이다. 기존의 군사동맹 네트워크

워드로 팽창하는 중국의 군사력을 억지하는 한편, 세계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동아시아 경제가 중국 중심으로 통합되는 추세를 견제하기 위해 태평양 남부에서부터 동북아의 일본까지 FTA 네트워크를 확장하여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 확산을 저지하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은 2011년 중국 견제를 한층 강화하고자 아·태 지역에서 미국 주도 안보 네트워크를 강화시켰다. 무엇보다도 미국은 동북아 지역 미국 안보의 핵심축인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을 강화하였다. 한·미동맹의 경우, 미국과 한국은 10월 개최된 정상회담에서 한·미동맹을 기존의 안보 전략 동맹보다 한 단계 더 도약시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통한 경제 동맹 관계까지도 추구하는 다원적 동맹으로 발전시키기로 합의하였다. 이어 같은 달 개최된 제43차 한·미 안보협의회에서 미국은 재정 적자 감축을 위해 국방비를 대규모 삭감하더라도 주한 미군은 현재의 28,500명 수준을 유지하겠다고 공약하였다.

미·일동맹의 경우 미군 후텐마 기지 이전 문제로 동맹의 응집력이 약화되었었으나, 일본 정부가 2010년 후텐마 기지를 오키나와 내 나고시 헤노코로 이전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재도약의 발판이 마련된 바 있다. 오키나와 주민들의 반대로 아직 구체적 이전 계획이 확정되고 있는 않으나, 일본의 노다 총리는 2011년 9월 오바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미·일동맹이 일본 외교정책의 핵심축이며, 후텐마 기지 이전과 관련한 기존 합의를 착실히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였다.

미국은 또한 필리핀, 태국과의 동맹관계, 싱가포르와의 안보 협력 등을 통해 중국의 남중국해에서의 공세적 행동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일례로 미국은 6월 필리핀과 중국 간의 분쟁 수역인 난사군도 인근에서 합동 군사 훈련을 실시하였다. 남중국해 영토분쟁

과는 관련성이 없다는 양국의 외교적 수사에도 불구하고, 동 혼련은 미국이 중국과 영토분쟁을 겪고 있는 동맹국인 필리핀 등 지역 국가와의 연대로 중국의 동남아시아에서의 세력 확장을 견제하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한 것이었다. 클린턴 국무장관은 미국·필리핀 군사동맹 60주년을 기념하여 11월 필리핀을 방문하였고, 미 구축함 USS 피츠제럴드에서 향한 연설에서 필리핀에 대한 광범위한 군사적·경제적 지원을 약속했다.

유사한 맥락에서 미국은 베트남, 미얀마 등 미국에 우호적이지 않았던 국가들과도 안보 관계를 증진시키고 있다. 미국의 동맹국들 또한 이러한 경향에 동참하고 있다. 특히 해상통로의 안전 확보와 막대한 경제적 이익의 고려, 그리고 동아시아 지역의 주도권 확보 경쟁을 위해 남중국해에 개입하려는 일본은 9월에 필리핀과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영유권 분쟁을 주요 의제로 정부 간 협상을 개최하였고, 10월에는 베트남과 남중국해 진출을 노리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방위협력 각서를 교환하였다.

미국은 호주와의 동맹도 강화하고 있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2011년 11월 캔버라에서 줄리아 길라드 호주 총리와의 정상회담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2012년 미국 해병대 250명을 호주 북부 다윈 지역에 상주시키고, 이를 2016년까지 2,500여 명 수준으로 늘릴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이는 중국 해군이 태평양과 남중국해 지역에서 해군력을 증강시키고 있는 것에 대한 대응으로, 미국의 ‘아시아로의 귀환’을 명확히 한 것이다.

주지할 것은 미국이 자국 주도 안보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감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미국의 동맹국들을 연계시키는 ‘소 다자주의’ 전략을 채

택하고 있다는 점이다. 무엇보다도 미국은 미국·일본·한국과 미국·일본·호주 3국 간의 공조 체제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미국·일본·한국의 연계를 위해 미국은 미·일동맹과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는 가운데 한국과 일본의 ‘가상 동맹’(virtual alliance) 관계를 발전시키려 하고 있다. 2011년 3월 미 의회 청문회에서 캠프벨(Kurt Campbell) 미 국무부 아·태담당 차관보는 미국이 동북아시아의 안보 구도를 더욱 통합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한·미·일 3국 간 협력을 더욱 증진시킬 것이며, 이를 제도화하는 것이 미국 외교의 중요한 초점이라고 강조하였다.

미국·일본·호주 3국 간의 공조 체제 또한 미·일동맹과 미·호동맹의 기반하에 2001년 3자 안보 대화로 태동하였다. 3국 안보 공조는 현재 3자 전략 대화(Trilateral Strategic Dialogue: TSD)로 격상되었는데, 3국이 TSD를 매개로 합동 군사훈련까지 실시하고 있는 등 안보 협력을 심화시키고 있다. 그런데 TSD는 미국과 일본이 인도와 군사·경제 협력을 강화해 나감에 따라, 중국을 압박하는 4자 안보 협력 형태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은 자국 주도 안보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가는 것에 더해 중국이 주도하는 배타적 동아시아 다자주의(exclusive East Asian multilateralism)를 벗어난 미국이 포함되는 포괄적 아·태지역 다자주의(inclusive Asia-Pacific multilateralism)지역 질서를 확립하려 하고 있다. 이의 일환으로 미국은 2011년 11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동아시아 정상회의에 처음으로 참석하였다. 또한 경제 영역에서는 중국을 배제하는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TPP) 등을 통해 역내 국가들과의 다자적 경제동맹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2009년도 하반기 후진타오가 밝힌 도광양회(韜光養晦)를 견지하되 유소작위(有所作爲)를 추진하는 신외교정책에 따라 정치적 영향력 확대 및 주변 지정학적 전략 거점을 구축하는 동북아 전략을 추진하면서 동북아 안보 갈등이 야기되고 주변국들의 심한 반발을 샀다. 2011년 상반기 중국은 ‘힘의 외교’로 인해 악화된 국제사회의 여론을 의식하면서 대외정책 기조를 조정하는 과정이 다시 진행되고 있다. 중국 다이빙궈 외교담당 국무위원은 2010년 12월 6일 중국 외교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례적으로 ‘평화적 발전노선을 견지하자(堅持走和平發展道路)’라는 장문의 글을 게재하면서 ‘힘의 외교’ 논란을 불식시키려는 시도를 하였다. 중국 외교의 책임자가 중국이 지향할 바는 여전히 도광양회(韜光養晦)와 화평발전(和平發展·평화로운 발전)에 있음을 공식적으로 재확인하였다. 중국은 국내적으로 소강사회(小康社會)의 전면적 실현, 대만과의 통일, 변경지역의 안정, 국가통합 등의 과제를 안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동아시아지역 국가들과의 경제협력, 안정적 외교안보관계의 확보, 그리고 이를 통한 주변 환경의 안정적 관리가 절실하기 때문에 2010년 공세적 대외정책이 수정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후진타오 국가주석은 정상회담 직후 워싱턴에서 한 연설을 통해 “대만과 티베트 관련 문제는 중국의 주권에 관련된 핵심이익으로 13억 중국 인민의 감정과 관련돼 있는 것”이라며 예의 핵심이익론을 제기하였다. 중국 양제츠 외교부장이 2011년 11월 미국에게 양국 모두 서로의 핵심이익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양부장의 이러한 발언은 미국이 호주에 미군기지 설치 계획을 밝히고 인도네시아에 F16 전투기 판매를 결정하는 한편, 미얀마에 클린턴 국무장관을 보내는 등 남중국해를 축으로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는 가운데 나왔다. 이러

한 중국의 핵심이익 발언은 평화발전 전략을 추진하지만 티베트, 대만, 신장, 남중국해 등 자국의 핵심이익에는 적극 대응하겠다는 대외정책 기조의 연장선에 있다.

중국은 2011년 8월 첫 항공모함 바랴크호를 발진시키고 9월 대만에 무기판매를 강행한 미국에 대해 전방위 공세를 펴는 한편, 12월 후진타오 국가주석이 자국 해군에 현대화와 더불어 전투준비 강화를 주문하는 등 미국의 대중국 압박에 연성 균형화 전략으로 대응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해군력 강화를 위해 북해함대와 동해함대, 남해함대에 이어 태평양지역을 관할하는 태평양 함대를 창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신화통신에 게재되는 등 대양해군 양성에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미국의 경제적 주도권에 대해서도 중국은 브릭스(BRICS) 국가들과 함께 국제경제제도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후진타오 국가주석은 2011년 4월 브릭스(BRICS) 회의에서 국제통화기금(IMF)을 비롯한 국제경제 금융기구의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공동선언문에 담았다. 이 공동선언문은 세계경제변화 추세를 반영해 신흥경제체제와 개발도상국의 발언권과 대표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국제화폐와 금융제제의 결합이 노출됐으며, 신흥국들이 앞장서서 개혁을 지속하고 미 달러화에 대한 의존을 낮추기 위해 보다 광범위한 국제통화체계 구축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IMF의 특별인출권(SDR) 역시 개혁이 필요하다는데 입장을 같이했다. 이는 중국이 향후 10년이 국제체제의 변혁기인 동시에 중국의 국제지위와 영향력을 증대시킬 수 있는 전략적 호기라고 판단하고 중국이 동의하지 않은 규칙과 규범에 대해 과거에는 전략적 적응의 태도를 취해 왔지만 앞으로는 제도의 개선과 변환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1년 11월 13일 폐막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에서 미국은 12개국을 끌어들여 TPP를 공식화하고 중국을 배제하였다. 경제와 안보 양면에서의 이러한 미국의 공세에 중국은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다. 미국이 문제 제기하는 ‘위안화 환율조작’은 보편 논리가 아닌 패권국의 논리에 기초하고 있다며 미국 중심 금융질서의 정당성을 문제 삼았으며, 남중국해 문제는 중국과 아세안(ASEAN)국가 간의 문제이므로 미국이 개입할 수 없다고 강력히 저항했다. TPP가 오바마 대통령의 대선용 정치슬로건에 불과하다고 비판하면서 중국은 아시아 국가들만의, 그리고 아시아의 형편에 맞는 FTA 네트워크를 제시하고 있다. 당장 2011년 11월 19일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한·중·일 FTA 산·관·학 공동연구를 연내에 종료하고 조기에 교섭을 개시할 수 있도록 합의를 종용하는 한편,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조하에 광역 동아시아 FTA를 주창하며 반격에 나섰다.

2012년 동북아 정세는 미국이 동아시아 지역, 그리고 동북아시아에서의 영향력 회복을 목표로 개입과 관여에 많은 노력을 경주하는 미국과 팽창하는 경제력과 다자협약과 협력체를 통해 미국의 관여와 개입을 견제하려는 중국의 대외정책에 의하여 결정될 것이다. 2012년 동북아 정세는 세계경제 위기 악화, 미·중 간 급속한 세력전이 발생 등의 외생적 요인과 함께 권위주의적 정치체제, 과도한 중화 민족주의 동원, 미국의 예외주의에 의한 공세적 대중정책 추진 등의 내생적 요인으로 대립·갈등적 관계로 발전될 수 있다. 2012년도에는 심화되는 세계경제 위기로 인하여 미·중관계를 협력적 방향으로 유지시켜 주는 공동의 상호이익 분야는 매우 약화될 것이다. 다만 경제적 관계가 파국을 맞으면 경제적 상호의존도가 손상되면서 공동의 손해가 발생되기 때문에

양국은 최소한의 수준에서 경제적 관계를 유지하되, 기축통화문제, 국제경제제도 개혁 문제, 위안화 절상문제 등과 같은 분야에서 상당한 수준의 갈등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미국의 대중 안보정책이 공격적일 경우 사활적 이익과 핵심이익 분야에서는 미국과 심각한 수준의 갈등을 빚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라 동북아 지역 불안정이 심화될 수 있다. 예컨대, 2011년도 미국과 중국은 북한 핵문제, 북한 도발 등의 북한 문제를 한반도 위기관리 차원에서 접근했으나, 북한체제 내부의 우발적 사건, 북한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 미국 내 정치적 사건 등의 발생으로 동북아 정세는 예기치 않게 불안정이 극대화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 다만 10년 이내에 중국의 군사력이 미국과 대등한 수준으로 증강되지 않을 것으로 분석되므로 중국은 국제질서 내에서 온건개혁을 브릭스(BRICS) 국가들과 함께 추진할 것이다.

- 황병덕·남북협력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박재적·국제관계연구센터 부연구위원

2. 북핵문제

2011년 1월 19일 워싱턴에서 개최된 미·중 정상회담에서 양국 대통령이 6자회담의 유용성을 확인하고, 남북대화를 전제로 하긴 했지만 회담의 조기 재개를 촉구한 이후 2011년에는 6자회담 개최를 위한 움직임이 활발했다. 남북대화를 우선 열고 이후에 미·북 대화를 가진 다음 6자회담을 개최한다는 기본 구도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다양한 회담이 열렸다:

- 남북한 6자회담 수석대표 제1차 비핵화 회담(7월 22일, 발리)
-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 방미, 제1차 북·미 대화(7월 28~30일, 뉴욕)
- 북·중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8월 4일, 북경)
- 천영우 외교안보수석 방미(8월 9~11일, 워싱턴)
- 한·중 6자회담 수석대표 회담(8월 25일, 북경)
- 남북한 6자회담 수석대표 제2차 비핵화 회담(9월 21일, 북경)
- 제2차 북·미 대화(10월 24~25일, 제네바)

이 과정에서 한·미·일 3국은 비핵화를 위해서 북한이 다음 세 가지 사전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했지만 북한은 수용하지 않았다: ① 핵과 장거리 미사일 등 WMD 실험 중지 선언, ② 우라늄농축 프로그램(Uranium Enrichment Program: UEP) 중단, ③ 국제원자력기구 사찰단 복귀. 2011년 9월에 열린 제2차 남북 6자회담 수석대표 회의에서 한국은 6자회담 개최 이전에 실험 중단을 선언할 것을 요구했지만 북한은 6자회담 재개 이후에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UEP 문

제의 경우 남한은 가동을 중단한 후에 6자회담을 하자는 입장인 반면, 북한은 UEP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것으로 중단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IAEA 사찰단의 복귀 문제도 한국은 UEP 가동 중단 등을 확인하기 위해 사찰단의 복귀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북한은 UEP 가동을 전제로 사찰단을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현재 북핵문제 해결의 장으로 남아 있는 6자회담이 2012년에 활성화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국제사회 전반에 북한정권의 핵포기 가능성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인 데다가, 대선을 치러야 하는 한국, 미국, 중국, 러시아가 북핵문제 해결에 심혈을 기울일 가능성도 희박하기 때문이다.

주목되는 것은 2012년 3월 26~27일 서울에서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가 열린다는 점이다. 이 회의에는 제1차 워싱턴 회의 때와 비슷한 규모로 50여 개국 대표들이 모여서 핵물질의 안전한 관리 문제에 각국 정상들이 관심을 갖고 해법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회의는 대한민국 건국 이후 최대의 국제회의로서 한국이 세계평화에 기여함으로써 국제무대에서 나라의 격을 높이고 국익을 증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

다만 핵안보라는 사안의 특성상 서울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가 북핵문제 해결의 장은 아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북핵폐기는 정상회의의 의제가 아니기 때문에 북핵문제 해결에 대한 과도한 기대는 금물이다. 다만 북한이 국제사회의 규범을 무시하면서 핵기술을 제3자에게 이전하는 확산 행위는 정상회의에서 다루질 수 있을 것이다. 핵물질과 핵기술 불법 거래는 핵테러로 가는 관문으로서 핵안보의 직접적인 대상이기 때문이다.

북핵문제와 관련해서 초미의 관심사는 제3차 핵실험의 실시 여부가 될 것인데, 결론적으로 그 가능성이 적지 않다. 북한은 2006년 10월 9일 첫 번째 실험을 실시했고, 유엔 안보리결의안 1718호가 가동 중인데도 불구하고, 2009년 5월 26일 제2차 핵실험을 단행했다. 국제사회의 만류와 경고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핵무기를 손에 쥐기 위해 모험적인 무리수를 두어온 것이다. 2012년은 한국, 미국, 중국, 러시아가 모두 대선을 치러야 하는 시기로서 동북아의 정세가 불안정할 수 있는 안보적 취약기이기 때문에 북한 지도부는 이 틈을 놓치지 않으려 할 것이다.

- 전성훈·북한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3. 한국의 대외관계

가. 한·미관계

2011년 한·미관계는 그간 이명박 정부와 오바마 행정부 사이에 쌓아온 돈독함을 더욱 더 심화시킨 최상의 해였다. 이를 가장 잘 보여준 사례가 10월 초 워싱턴에서 개최되었던 한·미 정상회담이다. 오바마 대통령 취임 이래 다섯 번째였던 올해 정상 간 만남에서는 공식 만찬은 물론이고 이례적으로 현지 한국식당에서 양국 정상이 함께 비공식적 식사도 같이 했으며, 디트로이트 GM자동차 생산공장에도 동행했다. 또 한국 대통령으로선 13년 만에 미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연설도 했고, 미 합참의장 전용 작전상황실인 펜타곤의 ‘전쟁룸’에서 미군 수뇌부로부터 안보정세에 관한 브리핑도 받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명박 대통령의 방미일정에 맞추어 미 의회가 초당적으로 한·미 FTA를 비준함으로써 양국 정상 간 인간적 유대감은 물론 양국 간의 두터운 신뢰관계를 대내외에 널리 과시하였다.

그리고 미국 의회에 이어 11월 한국 국회에서도 다소 잡음이 있었지만 한·미 FTA를 비준함으로써 양국의 협력관계는 외교안보영역을 넘어 경제영역으로까지 확대되어 명실상부한 ‘포괄적 전략동맹’ 또는 ‘다원적 전략동맹’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시장규모 면에서 서로에게 모두 두 번째로 큰 무역상대국인 한국과 미국은 이번 FTA 체결로 향후 상당한 교역 및 투자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고, 그래서 한·미 FTA를 1953년 10월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이래 최대의 의미있는 양국 간 협정이라고 평가하기도 한다.

군사적인 측면에서도 성과가 있는 한 해였다. 첫째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비책으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확고히 하기 위해 지난해 설립한 ‘확장억제정책위원회’(EDPC)를 가동하여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 계획을 수립한 것이다. 이로써 그간 수차례 구두로만 보장받던 미국의 확장억제 제공약속이 보다 확실해진 것이다.

둘째는 한·미 연합으로 ‘공동 국지도발 대비계획’을 수립키로 11월에 열린 제43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합의한 것이다. 2010년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포격으로 자명해진 북한 비대칭 전력의 위협과 북한 내부사정으로 인한 국지도발 가능성 증대에 따라, 동맹차원에서 공동으로 그에 대비하기 위해 구체적인 대응계획을 수립키로 합의한 것이다. 이는 북한의 국지도발에 대한 응징보복 의지와 수단을 명확히 함으로써 북한의 잠재적인 도발시도를 예방할 수 있다는데 의미가 있다.

대북정책에서도 긴밀한 한·미 공조가 이루어져 왔다. 북한이 건설적이고 진정성 있는 대화자세를 보일 때까지는 북한과 대화하지 않겠다는 소위,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 정책을 추구해온 오바마 행정부는 이명박 정부의 원칙있고 일관된 대북정책에 신뢰를 보여왔다. 그래서 북핵문제 해결에 소극적이란 국내외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항상 남북대화가 북·미대화나 6자회담보다 선행되어야 한다는 한국 측 주장을 지지해왔다. 그런 연유로 2011년 1월 워싱턴에서 개최된 미·중 정상회담에서 남북대화 - 북·미대화 - 6자회담 순서의 ‘3단계 접근법’에 입각한 북핵해결 시도방식에도 합의하였다.

대북정책에 있어 긴밀한 한·미 공조는 최근 김정일 위원장 사망에 대한 대응과정에서도 확인된다. 예컨대, 북한 정부가 아니라 북한 주민에 대해 애도를 표시한 것이나, 대통령이 아니라 장관(한국은 통일부장관,

미국은 국무장관이 애도의 뜻을 발표를 한 것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돈독한 한·미관계는 2012년에도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 중국의 부상으로 인해 오바마 대통령이 최근에 와서 아·태지역 중시를 강조하긴 했지만 안보 측면에서는 여전히 아·태지역보다 중동지역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아·태지역에서는 현상유지를 더 선호할 것이기 때문에 현재의 돈독한 한·미관계를 그대로 안정적으로 유지하려고 할 것이다.

단지 우려되는 상황은 두 가지이다. 첫째는 한국이건 미국이건 내년도 대선과정에서 반미 혹은 반한 감정을 자극하는 이슈가 정치적 쟁점으로 대두되는 경우이다. 그럴 경우 여론을 지나치게 의식하거나 이용하려는 후보자들이 나와 한·미관계에 균열을 초래할 수도 있다.

둘째는 북한이 무모하게 국지도발을 또다시 감행하는 경우이다. 2012년에는 주변국들 모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일단 전부 안정을 최우선시 할 것이고, 그런 연유로 북한의 도발시도를 강하게 억제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체제가 제대로 안착하지 못할 경우는 내부의 불만이나 혼란을 외부로 돌리려는 의도에서 국지도발을 감행할 수도 있다. 그럴 경우 혹시 재선을 의식한 오바마 대통령이 소극적인 대응을 보이거나 아니면 반대로 너무 강경한 대응을 보인다면 한·미관계에 마찰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다.

종합컨대, 지난 수년간 아주 긴밀한 유대관계를 유지해온 한·미관계는 내년에도 계속해서 돈독할 것으로 예상되나, 한국이나 미국의 대선 캠페인 과정과 북한내부 사정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은 있다.

- 최진욱·북한연구센터 소장

나. 한·중관계

2010년 북한의 도발에 대한 확연한 입장 차이를 확인하면서 상호 반목했던 한·중 양국은 2011년은 상대적으로 평온하게 관계회복을 도모하려는 노력을 해왔다고 볼 수 있다. 북한, 북핵문제에 대한 양국의 전략적 입장차가 여전히 좁혀지지는 않았지만, 양국관계가 북한 문제 때문에 악화되지는 말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2011년 초 이명박 대통령은 굳건한 한·미 동맹관계를 강조하면서도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발언을 함으로써 경색된 양국관계를 완화시키겠다는 의지를 피력했고(2.7), 중국 역시 북한과의 정치경제적 교류를 확대시키면서도 동시에 북한에게 더 이상의 무력 도발은 안 된다는 압력을 행사했다. 특히 중국은 양제츠 외교부장, 마자오쉬 대변인 등 주요 외교 관계자들이 한반도의 평화, 안정, 비핵화가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의 3대 목표라고 강조하는 등 한반도의 안정을 강조하는 모습을 연출했다.

북한 문제로 인한 양국관계 악화는 막아야 한다는 공감대는 2011년 2, 3월에 연이어 열린 양국 외무장관 회담에서도 이어졌으며, 양국관계 회복을 위해 전략적 소통과 고위급 교류 강화 등이 필요하다는 데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우호적 분위기는 3월 상하이 총영사관 스캔들에 대한 양국 간 입장 차이가 발생하면서 잠시 멈칫했으나, 언론 간의 충돌 수준에서 마무리되었다. 양국 간 전략적 소통은 한·중·일 3국 정상회의(5.22)에서의 정상 간 교류와 양국 총리와 부총리의 상호 방문이 진행되면서 더욱 확대되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중국 방문기간(4.12~15) 동안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 등 중국 주요 지도자들 만나고, 양국 간 실질적 협력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중국 역시 차기

총리로 물망에 오른 리커창 상무 부총리가 한국을 방문(10.26~27), 이 명박 대통령 이하 주요 인사들을 접견하고, 양국관계의 미래지향적인 발전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으며, 경제, 사회 등 협력의 폭을 확대했다. 물론 리커창 부총리 방한 이전 외교 일정에 없던 북한 방문이 사전에 진행되어, 중국이 한·미관계 발전에 대한 불편한 심기와 견제의도를 드러냈다는 분석이 제기되기도 했다.

군사교류 분야에서도 진전이 있었다. 양국 국방장관 회동(7.14~16)에서 양국은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에 부합하는 국방관계 발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할 것을 합의했고, 이 합의를 통해 고위급 국방전략대화를 정례화시키고, 상호 간의 군사교육 교류 재개 등을 성사시킴으로써, 과거에 비해 교류의 폭을 확대했다. 그러나 이는 한·미동맹 강화현상에 대한 반사적 이익일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 대체적 평가이다.

평온했던 정치정세에 비해서 경제 분야는 매우 활기찬 한 해였다. 중국의 대한민국 투자가 지속적으로 급증했고, 한국기업의 중국 시장 점유율도 사상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양국 경제관계는 호조를 띠었다. 더구나 한·중 경제장관회의(9.28)에서 양국은 선진국의 경제위기를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하는 등 상호 협력을 강화했고, 리커창 부총리의 방한을 계기로 통화스와프 규모 확대, 전자상거래 정책협의회 등 상호간 금융, 무역투자 부문에서의 협력이 더욱 확대되었다.

2012년에도 한·중관계의 안정적인 발전은 지속될 전망이다. 특히 2010년의 경험을 통해 양국 정부가 더 이상의 관계 경색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며, 2012년은 한·중 수교 20주년으로 정치, 경제, 사회문화 각 분야에서 기념행사가 열리는 등 우호적 분위기가 연출

될 것이다. 또한 여수엑스포 개최, 한국 방문의 해 등 양국 민간 차원의 교류가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또한 한·중 FTA에 대한 중국 측의 적극적인 요구에 한국 정부가 2012년부터 대응을 할 가능성이 높아져 양국 간 무역 규모 및 상호투자가 급속히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2012년은 북한 김정일 위원장의 사망으로 북한체제의 불안정이 확대될 것이고, 동북아 주요 각국의 지도부가 교체되는 전환기여서 동북아 지형이 매우 복잡하게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 내부 승계 문제의 불안정, 군사적 돌출행동 등이 발생한다면, 북한 문제에 대한 입장에서 온도 차가 있는 한·중관계는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더구나 중국어선 불법 조업문제,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 등에 대해 중국이 힘의 외교를 발휘할 가능성이 있으며, 북한과의 관계 고려로 탈북자 문제에 대한 중국의 강경입장이 지속된다면 한·중 간의 잠재적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

- 이기현·국제관계연구센터 부연구위원

다. 한·일관계

자민당에서 민주당으로 정권 교체와 더불어 등장한 하토야마 내각은 ‘신(新) 동아시아 시대’의 기틀 마련과 ‘동아시아 공동체’의 구상을 지향한 동아시아 외교를 전개하면서 한·일관계를 전략적으로 중시하는 정책을 시행하였다.

하토야마 내각은 2010년 4월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자제하여 민주당 간부들이 불참하였고, 동년 5월에는 ‘한·일 강제병합 100년’과 관련하여 한·일 지식인 공동성명이 발표되어 일본의 강제적 식민지 지배

를 시인하기도 하였다. 아울러 하토야마 총리 내각은 천안함 폭침 사건과 관련, 한국을 지지하며 한·일의 전략적이고도 긴밀한 공조를 전향적으로 전개하였다.

이와 같은 하토야마 내각의 한·일관계 중시 전략은 간 나오토 내각에서도 이어졌다. 간 나오토 총리는 ‘한·일 강제병합 100년 담화’(2010.8.10)를 통하여 한국인의 뜻을 “거스른 식민지 지배가 가져온 큰 손해와 고통에 대해 다시 한 번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표명하였고, 아울러 ‘조선왕실 의궤’ 등 한반도에서 유래한 귀중한 도서를 가까운 시일 내에 인도하겠다고 밝혔다. 간 나오토 총리의 한국 문화재 반환의 표명에 따라, 2010년 11월 14일의 요코하마 한·일 정상회담장에서 문화재 인도를 위한 서명식이 개최되었다.

일본 정부의 역사 문화재의 반환 결정으로 한·일관계는 한층 성숙되는 계기를 맞이하였고, 또 한류의 지속적인 영향으로 인해 일본 내 한국에 대한 우호적 인식과 반응은 상당히 확산되었다. 40~50대 여성 중심이었던 한류 붐이 한국의 걸그룹 등의 활동에 의해 젊은 세대는 물론, 40~50대의 남성들에게도 확산되고 있다. 이처럼 역사, 문화재 등의 반환과 더불어 과거사 문제에 있어서 한·일관계는 그다지 갈등을 겪지 않고 우호적으로 전개되었다.

그러나 독도영유권 문제와 관련, 자민당 소속 극우 국회의원 3명이 2011년 8월 한국을 방문하는 파동을 일으키면서 한·일 간의 신뢰에 상처를 생기게 하였다. 자민당 일부 의원들의 울릉도 방문을 위해 방한 문제가 처음 제기되었을 때, 일본 국내에서는 거의 관심이 없었고, 일본 언론들도 거의 관심을 표명하지 않았다. 우파성향의 산케이 신문만 1단 기사로 취급 보도하였다. 그러나 자민당 3명의 의원들이 김포 공

항에서 입국 불허가 되는 상황이 초래되면서, 주요 언론매체들이 주요 이슈로 보도하였다. 제1야당 자민당 소속 극우 국회의원들의 파동이지만, 간 나오토 내각의 한·일관계는 신뢰에 한계를 노정하였다. 즉, 이명박 정부와 한국은 비교적 ‘조용한 외교’로 대응하였지만, 일본에 대한 한국 국민의 신뢰는 저하되었다.

이후 간 내각을 계승한 노다 내각은 한·일관계의 주요 외교적 과제를 독도영유권 문제로 인해 갈등이 초래된 한·일관계의 신뢰구축으로 정하였다. 노다 요시히코 총리는 2011년 10월 18일 서울을 방문하고, 19일 이명박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는 총리 취임 이후, 첫 번째의 한·일 정상회담이다. 10월 19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노다 총리는 중층적인 한·일관계의 구축을 위해 북한 문제, 동아시아 정세, 경제 협력 및 공조 등 폭넓은 의제에 관해 의견을 나누었다.

한·일 양국 정상은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금융 시장을 선제적으로 안정시키기 위해 금융 통화 협력의 강화가 중요하다는 인식에 아래 700억 달러 규모의 한·일 통화스와프 실시에 합의하였다. 아울러 한·일 양국 정상은 연간 500만이 넘는 양국 국민 간의 활발한 교류가 한·일 양국관계의 든든한 기반이 된다고 평가하면서 문화교류, 청소년 교류를 포함한 인적 교류를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고, 한·일 FTA교섭을 가능한 한 조기에 재개하기 위해 실무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또 한·일 양국 정상은 북한의 핵 폐기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전에 긴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양국의 긴밀한 공조를 계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처럼 한·일 양국은 정상을 중심으로 북한 핵, 경제, 문화, 교류 등 다방면에서 공조를 합의하였다.

더욱이 2011년 12월 6일, 간 나오토 총리가 ‘한·일 강제병합 100년 담화’에서 ‘조선왕실 의궤’ 등 한반도에서 유래한 귀중한 도서를 가까운 시일 내에 인도하겠다고 약속한 지 1년 4개월 만에 도서 1,200책이 반환되었다. 반환된 도서는 2011년 10월 노다 요시히코 총리 방한 시, 돌려준 3종 5책을 제외한 147종 1,200책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조선왕실의궤 81종 167책, △이토 히로부미 반출 도서 66종 938책, △증보문헌비고 2종 99책, △대전회통 1종 1책 등이다.

따라서 2011년의 한·일관계는 독도영유권 문제와 관련, 자민당 소속 극우 국회의원 3명의 김포 공항 파동으로 다소 갈등을 겪게 되었지만, 비교적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였다. 그러나 한·일관계는 과거사와 독도 영유권 등과 관련, 양국의 신뢰 구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역사 교과서 문제, 독도 영유권 문제 등이 재차 발발될 경우, 한·일관계는 또 다시 갈등을 겪고 상처를 받으며 신뢰관계의 구축에 한계를 노정할 것이다.

- 배정호·국제관계연구센터 소장

라. 한·러관계

정상회담과 외교장관 회담, 외교차관 전략대화와 차관급 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양국 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가 강화되었다. 그러나 6자 회담 재개 문제와 관련 러시아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지지하다가 북·러 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기본입장 지지로 변화되었다. 경제면에서는 러시아의 현대화 추진, 교역과 투자 확대, 극동·시베리아 개발, 에너지 자원 등에 대한 양국 간 협력이 활발히 이루어졌다.

이명박 대통령 집권 이후 3번째로 러시아 상트 페테르부르크를 방문하여 메드베데프 대통령과 6번째 정상회담을 개최(11.2)하였다. 양국 정상은 한·러 관계가 제반 분야에서 내실있고 역동적으로 발전해 오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교역과 투자 확대, 에너지·자원·농수산업·산업·인프라 및 우주·과학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구체적인 성과 도출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하는 한편, 극동·시베리아 지역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남·북·러 연결 가스관의 안전성과 핵 문제 등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러시아 측의 협력을 기대하였다. 양국 정상은 또한 2012년 개최 예정인 서울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와 블라디보스토크 APEC 정상회의 준비에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으며 ‘제2차 한·러 대화 KRD 포럼’(10.31~11.2)을 성공적 개최로 평가하였다.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모스크바를 공식 방문하여 라브로프 외교장관과 외교장관 회담(8.8)을 갖고 정상외교 및 고위급 인사교류 활성화, 실질협력 확대, 한반도 평화·안정 및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협의를 하였다. 모스크바에서 제12차 한·러 차관급 정책협의회(10.21)와 서울에서 제3차 한·러 외교차관 전략대화(11.23)가 개최되어 양국 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 내실화를 위한 실질협력 확대 방안들이 협의되었다. 2010년 한·러 수교 2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이명박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시(2010.9) 푸틴 총리가 기증 의사를 표명한 시베리아 호랑이 한 쌍이 인천공항에 도착(5.21)하였다. 우리 정부는 러시아 정부의 한국과의 우호 증진 노력을 높이 평가하였다.

안보·군사면에서, 위성락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방한한 보로다브킨 러시아 6자회담 수석대표와 회동(1.28)하고 북한, 북핵문제 현황 및

향후 대응방안 등에 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였다.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한·러 외교장관 회담(8.8)에서는 발리 남북 비핵화 대화(7.22) 및 뉴욕 미·북 대화(7.28~29) 이후 북핵 및 북한 문제 현황에 대한 평가와 향후 대응방향에 대한 의견이 교환되었다. 우리 측은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구체적 행동으로 보일 수 있도록 러시아 측도 관련 노력과 역할을 계속해 줄 것을 당부하였고, 러시아 측은 대북 대화가 재개된 것을 환영하고 6자회담 재개의 여건 조성을 위한 노력을 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러시아 정부는 올란우데 북·러 정상회담(8.24)에서 ‘전제조건 없는 6자회담 재개’라는 북한의 입장을 지지하였다. 러시아는 이를 통해 북한의 대중 편향정책을 시정하고 대북 영향력 회복을 모색한 것으로 분석된다. 제2차 남북 비핵화 대화(9.21) 및 제네바 미·북 대화(10.24~25) 이후 임성남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모스크바를 방문하여 한·러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10.27)를 갖고 북핵 및 북한 문제 관련 상황을 평가하는 한편, 향후 대응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보로다브킨 러시아 수석대표는 이튿날 모스크바를 방문한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과도 회담을 갖고 6자회담 재개를 둘러싼 한국, 미국과 북한의 입장차를 조율하기 위한 막후 중재를 하였다.

이외에 우리 정부는 러시아 예카테린부르크에서 개최된 제2차 『고위급 안보회의』(9.21~22)에 참석하여 50여 개국 및 UN의 외교안보 담당 고위급 당국자들과 함께 극단주의에 대한 대응, 식량 안보 및 사이버 안보 강화를 위한 국제협력에 관해 논의하였다. 또한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제4차 한·러 대테러협의회(9.23)에서는 국제 테러리즘, 마약, 초국가 조직범죄에 대한 대처, 테러자금 차단 및 자금 세탁방지 분

아에서의 협력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경제면에서, 제7차 한·러 극동시베리아 분과위 및 제2차 한·러 비즈니스 포럼이 양측 정부대표와 경제인들의 참석하에 서울에서 개최(4.21)되었다. 분과위에서는 극동시베리아 지역에서의 교역, 투자 활성화 및 우리 진출 기업 애로사항 해소, 물류·교통·농수산·보건·의료·관광 등 분야 협력 증진, 지자체 간 교류 증대 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비즈니스 포럼에서는 양측 기업인 및 정부인사 약 120여 명이 참석해 우리 기업들이 관심을 갖는 러시아 지역개발 프로젝트의 설명회와 우리 기업 대 러시아 지방정부 또는 기업 간의 일대일 상담을 가졌다.

러시아 국토의 약 1/5을 차지하는 자원의 보고로 산업 발전, 경제 다변화, 인프라 구축 등 3대 발전과제를 추진하고 있는 사하공화국의 보리소프 대통령 일행이 방한(4.24~26)하여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고 한국 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희망하였다.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한·러 외교장관 회담(8.8)에서 양 장관은 2011년도 교역규모가 2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기대되는 등 양국 간 교역 및 투자가 꾸준히 확대되고 있는 것을 환영하고, 극동·시베리아에서 실질협력을 강화하며 러시아가 추진 중인 경제현대화를 위해 관심을 가지고 에너지 효율성, IT, 의료기술·기기 등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러시아 측은 북한 통과 가스관 건설을 위한 북·러 간 협의내용을 설명하였다. 러시아의 에너지 업체 가스프롬은 한국의 가스 파이프라인 실무회사인 한국가스공사와 가스관연결 프로젝트에 대한 로드맵을 체결(9.15)하였다. 러시아 극동지역 주요 언론인들 14명이 외교통상부 초청으로 우리나라의 녹색성장 정책, 에너지·자원, 물류, 농업 분야개발 역량 및 첨단 기술 등에 대한 특별기획 취재를 위하여

방한(9.19~24)하였다.

외교통상부, 주 블라디보스토크 총영사관, 러시아 극동지역 주정부가 공동주관하는 ‘에너지 자원 및 건설협력 설명회’가 블라디보스토크, 하바롭스크, 사할린 등 극동의 주요 3개 거점도시에서 러시아 극동지역 주정부 및 기업들을 대상으로 개최(10.16~22)되었다. 이는 한국과 러시아 극동지역 간 교역량 증가에 따라 에너지 자원협력에 거는 러시아 극동지역 주정부 및 현지 기업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한편, 한국기업들의 사업영역을 다각화하고, 향후 러시아 극동지역 에너지 시장으로 본격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북한을 통과하는 가스관 건설을 위한 한·러 정부 간 위원회 회의가 서울에서 개최(10.25)되었고, 이튿날 개최된 제11차 한·러 경제과학 공동위원회는 가스관 설치가 현실화되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 ‘제2차 한·러 대화 KRD 포럼’이 ‘현대화와 혁신’을 주제로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개최(10.31~11.2)되었고, 폐회식에는 양국 정상을 비롯해 양국 정치, 경제, 문화, 언론, 학술계 주요 인사 약 200여 명이 참석하였다.

2012년 한·러 양국은 서울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 블라디보스토크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등 고위인사 상호방문이 확대될 전망이다. 우리 정부는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에서 북한 비핵화 및 원자력의 안전한 이용 추진 등을 위해 러시아와의 공조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의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외교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정부가 북한의 기본 입장을 지지하고 있고 북한이 ‘강성대국 원년’을 내세우고 있어 북한 비핵화에 가시적 성과 도출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정부는 러시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가현대화 사업을 적극 지지하면서 제12차 한·러 경제공동위를 시베

리아·극동지역에서 개최하는 등 시베리아·극동지역과의 에너지, 자원, 농업, 임업, 수산업 협력을 강화할 것이다. 북한을 통과하는 가스관 연결 프로젝트와 관련, 러시아 가즈프롬과 한국가스공사 간의 실무협약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또한 러시아 진출 우리 기업 및 국민들의 체류 관련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인적교류 확대를 촉진하기 위한 양국 간 영사 부문의 협력이 증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 여인곤·국제관계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II

북한정세...



1. 대내정세

가. 정치동향

2011년 북한 정치는 2010년 9월 당대표자회 이후 정세 진행의 연속 선상에 놓여있었다. 이는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상-중-하의 대규모 인물 교체이다. 둘째, 함경북도, 양강도와 평안북도의 국경 지역에 대한 비사검열의 현격한 강화이다. 셋째, 김정은을 지도자로 부각시키기 위한 작업들이 지속적으로 강화되었다. 김정일이 2011년 12월 17일 사망했다.

먼저 권력 개편 동향을 보면, 2010년 당대표자회를 계기로 중앙당 주요 기구가 복원되는 가운데 대부분의 전직 도당 책임비서들이 중앙당으로 진출했다. 2011년에는 그 후속 권력 개편이 진행되었다. 1월에는 보위부 부부장이던 류경과 고위 간부 30명 가량이 처형당했다. 이는 김정은 보위부 장악을 위한 구 간부 숙청으로 보인다. 3월 16일에는 주상성 인민보안부장이 해임되었다. 4월 7일에 개최되었던 최고인민회의를 통해서도 인물교체가 있었다. 해임된 주상성을 대신하여 이명수 국방위 행정위원장이 인민보안부장으로 임명되었다. 국방위원 전병호가 물러나고 박도춘 군수담당비서 겸 정치국 후보위원이 그 자리를 차지했다. 내각에서는 이태남 부총리가 임명된지 1년도 안되어 ‘신병관계’를 이유로 해임되었다. 4월에는 군장성 38명에 대한 인사가 단행되었다. 오진우 전 인민무력부장 아들인 오일정 노동당 군사부장과 황병서 당조직지도부 부부장이 상장으로 승진했다. 6월 6일 열린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홍석형 계획재정부장이 해임되었다. 그의 해임 이유 중

하나는 ‘중국의 간첩’이었다는 것이었다고 한다. 9월 초 중순 무역성을 대상으로 한 내각 정치국 호위사령부와 국방위원회 연합검열조의 검열이 강도 높게 진행되었다. 중하층 간부 교체도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북한은 노당원을 ‘명예당원’으로 바꾸는 대신 그만큼 젊은 당원을 확보하고자 했다. 각급 당조직에 젊은 간부를 천거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으며, 시군 안전보위부와 인민보안서에 젊은 층 간부들이 대거 배치되었다.

2010년 9월 당대표자회 개최를 계기로 대부분의 도당비서가 교체되었다. 흥미로운 것은 도당 책임비서의 교체는 해당 도내 권력 구조에 충격과 개편을 초래하는 연쇄 파급 효과를 가져왔다. 이와 같은 변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지역이 평안북도, 함경북도와 양강도 지역이다. 김평해는 비서 및 책임비서로 20여 년 이상 봉직했던 평안북도당을 떠나 중앙당 비서가 되었지만, 김평해가 떠난 평안북도의 주요 간부는 대대적으로 숙청당했다. 거의 10년이나 봉직했던 홍석형이 떠난 이후 함경북도도 거의 1년 내내 비사검열을 받았다. 김경호가 비서 및 책임비서로 9년 동안 봉직하다 교체되었던 양강도도 함경북도와 마찬가지로의 취급을 받았다. 이태남(평안남도), 홍석형(함경북도)은 지방당 책임비서에서 중앙당 고위 직책으로 승진했지만 곧이어 숙청당했다.

2010년 9월 이후 2011년 내내 함경북도와 양강도 지역에 대한 비사검열이 현격하게 강화되어 진행되었다. 이러한 검열과 비사투쟁은 세방면으로 이루어져 있다. 첫째, 탈북 방지 투쟁, 둘째, 대마약 투쟁, 셋째, 중간 간부 검열과 물갈이이다. 지난 1년 동안 대략의 추이를 보면 이렇다. 첫째, 2011년 초 중동 재스민 혁명에 관한 소식이 북한 내부로 전파될 것에 관한 경계심이 강했다. 둘째, 보위부, 당을 제치고 보위총국(사령부), 호위총국이 직접 투입되었다. 셋째, 각종 명목과 조합의 합

동 검열이 시행되었는데 검열단 자체의 부패가 극심했다. 비사검열은 특히 함북도, 양강도 국경 연선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9월에는 평안북도도 확대되었다. 넷째, 호위총국과 보위총국이 직접 나서서 국경경비대와 세관을 그리고 변경지역 보안기관에 대한 검열을 실시했다. 다섯째, 탈북자 가족을 내륙에 추방하는 사업이 진행되었다. 여섯째, 국경지역에 CCTV를 설치하고 공민증 교체를 준비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탈북, 마약, 한류 유통만이 단속되는 것이 아니라, 도내의 당, 정권기관, 사법 검찰 부문, 그리고 세관이 검열되었다. 그 주요 목적은 간부 기율 잡기 또는 흠집을 잡아 물갈이 명분 만들기로 보였다.

2011년 12월 17일 김정일이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는 것이 19일 정오 발표되었다. 김정일에 대한 장례는 28일 국가장으로 치러졌고, 김정일은 금수산궁전에 안치되었다. 12월 급작스러운 사망은 2012년 북한 정세에 불확실성을 높였다. 2012년은 새로이 등장한 김정은이 확고하게 안착할 수 있는가를 가름하는 중요한 연도가 될 것이다. 또한 북한 정권이 2010년과 2011년 동안 준비해왔던 2012년 4.15 등의 행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이 이 행사를 홀로 주관하게 됨으로써 그에 대한 기대와 부담이 더욱 높아졌다. 북한 정권은 2012년을 놓고 “강성대국의 문을 연다”는 식으로 기대수준을 높여놓았고, 무엇보다 김일성 출생 100주년(4.15) 행사를 치러야 한다. 그러나 김정일 사망으로 북한 정권에게는 2012년 전반기 행사를 간소하게 치러야 한다는 명분을 가질 수도 있다. 그렇지만 어쨌든 그동안 준비해온 노력의 결과로 2012년 전반기에 일정하게 잔치 분위기를 고조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2012년 4.15 이후 그 후유증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이것이 2012년도 김정은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를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다. 첫째, 북한 당국은 2012년에 대한 기대수준을 한껏 높여 놓았지만,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것이다. 둘째, 북한 당국은 2012년 잔치 준비를 하면서 많은 무리한 정책을 추진했다. 이러한 후유증은 2012년 하반기에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정일 사망으로부터의 충격, 김정은 정권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함께 하반기가 되면 강성대국 기대감에 대한 허탈감이 강해지고, 또한 경제사정이 심히 악화될 가능성이 많다. 이를 관리하는 것이 하반기 북한 내부 정치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 박형중·남북협력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나. 경제동향

2011년 북한은 신년 공동사설을 통해서 ‘경공업’, ‘인민생활 향상’, 그리고 ‘강성대국 건설’을 강조하였으며, 이 중에서도 특히 경공업 발전을 통한 인민생활 향상과 강성대국 건설을 핵심정책 과제로 제시하였다. 이와 함께 경제정책 수행에서 당의 역할 증대를 주문하였다. 이러한 경제정책 기조는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4차 회의(4.7)를 통해서 발표된 예산지출계획에 반영되었다. 경공업부문에 대한 지출을 12.9% 증액한 것이다. 그러나 예산의 증가율만 놓고 본다면, 4대 선행부문(13.5%), 기본건설(15.1%)로 강성대국 건설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과 평양시 10만 세대 건설과 같은 대규모 토목공사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물론 북한 당국은 4대 선행부문도 인민생활 향상과 연관시켜 역할을 강조하였다. 예를 들면, “석탄이 팡팡 나와야 비료와 섬유도 쏟아지고 전기와 강재도 나온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처럼 ‘강성대국의 진입(?)’을 눈앞에 두고 주민생활의 향상을 주요 과제로 인식하고 있는 이유는 경제부문에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지 않으면 2012년에 강성대국 관련 축제분위기를 조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북한은 신년 공동사설을 통해 2011년을 ‘경공업의 해’로 강조하면서 경제의 모든 분야에서 경공업, 특히 소비품 생산 증대를 통한 인민생활 향상을 위해 총력을 집중할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구체적인 추진방안으로 경공업 공장과 기업소의 생산 정상화, 소비자 수요 충족, 경공업의 현대화와 과학화, 지방공업의 발전, 경공업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대 및 원료·자재의 주체화·국산화 등을 제시하였다.

이에 반해서 다른 산업부문의 과제들은 단순하게 제시되었으며, 주민생활 향상에 기여하는 문제와 연관해 역할을 주문하였다. 특징적인 점은 4대 선행부문에서 그동안 우선적으로 강조되었던 금속부문은 뒤로 밀리고 석탄생산 증대가 최우선적으로 강조된 부분이다. 이는 석탄생산 증가를 통한 비료(주체비료)와 섬유(주체섬유) 그리고 철강(주체철) 및 전력의 증산을 염두에 둔 것으로 판단된다. 농업부문의 중요성은 여전히 강조되고 있지만 지난해에 비해 정책적인 우선순위가 한참 밀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북·중 경제관계의 가속화에 따라 대외경제관계에서 새로운 방향이 제시될 가능성이 점쳐지기도 했지만 특별한 언급없이 자력갱생의 원칙을 강조하고 있어서 급격한 변화가 나타나지는 않을 것임을 암시하였다. 다만, 자력갱생을 통해서 “우리 나라의 풍부한 지하자원을 적극 개발리용하여 인민생활향상과 경제강국건설에 필요한 원료도 해결하고 자금도 확보”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외화획득을 위한 자

원 수출을 확대할 것을 시사하였다.

2011년 북한경제의 실적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2010년에 비해 특별히 상황이 악화된 부분은 발견되지 않고 있으며, 농업부문을 비롯해 건설, 광업, 경공업 등의 부문에서 2010년에 비해 오히려 실적이 향상된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FAO/WFP의 보고서(2011.11.25)에 따르면, 2011년 곡물생산량은 기상여건의 악화에 불구하고, 전년도에 비해 8.5% 증가한 547.5만 톤(조곡 기준, 정곡기준 466만 톤)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러한 성과는 비료 수입의 증가, 연료와 전력공급의 증가 및 농약 공급의 확대에 기인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2011년은 강성대국 건설을 위한 대규모 토목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점이 건설부문의 실적으로 연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외부문에서의 실적은 ‘5·24조치’의 여파로 남북교역은 부진을 면하지 못한 반면에 북·중무역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남북교역(1~10월)은 전년 동기대비 12.6% 감소하였으나, 북·중무역(1~10월)은 전년 동기대비 73.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남북교역이 막혀있는 상황에서 강성대국 건설에 필요한 외화획득을 위해 중국에 대한 수출을 확대(전년 동기대비 125.3%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2012년 북한 경제 정세를 분석하는데 있어서 핵심은 “김정일 위원장의 사망이 북한의 경제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와 “경제강국 진입을 선언할 수 있을까?”라고 할 수 있다. 먼저 2012년 북한의 경제정책은 김정일 위원장의 사망에 민감하게 반응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2012년 국정지표와 과제를 담아 발표하는 신년 공동

사설의 내용을 수정하기 위한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기존의 경제 정책 기조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2012년 한 해 동안 발생하게 될 경제 분야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식에 있어서 새로운 접근방식이 시도될 가능성이 있으며, 주민들의 불만 해소와 지도자로서의 정통성 확보라는 차원에서 식량 및 생필품 공급 증대 등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조치들이 우선적으로 검토될 가능성이 있다.

현 상황에서 북한당국의 가장 큰 고민은 예정대로 ‘경제강국 진입’을 선언할 것인가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김정일 위원장의 사망을 핑계로 ‘경제강국 진입’을 선언하는 시기를 연기하는 것이다. 최소 1년에서 최대 3년까지 연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이 갑작스럽게 사망함에 따라 진행되고 있던 공사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고 변명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그동안 공언한 대로 ‘경제강국 진입’을 선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북한 당국은 김 위원장의 필생과업이 2012년에 경제강국을 건설하는 것이었으며, “불철주야 애쓰다가 과로로 사망했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다. 또한 유지를 받들어 이를 완수하자고 주민들의 헌신과 인내를 강요하는 것이다.

결국 북한 당국으로서는 김 위원장의 사망을 핑계로 시간을 벌면서 김 위원장의 유훈임을 내세워 주민들을 동원하여 남은 공사를 완료하는 방안을 가장 선호할 것으로 보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후계자의 지도력을 과시한다는 측면에서 최근에 이룩한 경제적 성과를 과시하고자 하는 유혹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후자의 동기가 더 강력할 경우 북한 당국은 조기에 애도기간을 끝내고 경제강국 진입을 강조하는 행사를 개최할 가능성이 있다.

경제강국 진입을 과시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그동안 주장해 왔던 바대로,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 경제부문의 첨단화·정보화, 주민들의 생활향상, 그리고 현대화된 평양시 건설 등의 성과를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은 ‘주체철’, ‘주체섬유’, ‘주체비료’ 생산체계의 완성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키면서, 이 같은 ‘주체공업’의 구축을 통해서 자립경제 건설을 위한 기술적·물리적 토대가 마련되었다고 선전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부문의 첨단화와 정보화를 이루었다고 선전하기 위해서 생산현장의 자동화(CNC화)와 휴대전화의 보급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위성발사 및 핵실험 등의 사례를 들어 첨단 과학부문의 성과를 과시할 것으로 보인다. 주민들의 생활향상이라는 측면에서는 식량배급의 정상화를 시도하고 전력 공급능력 확대 등을 주요 성과로 내세우고자 할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더하여 대내외적 선전장인 평양을 최대한 치장하여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자 할 것으로 평가된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에 대한 식량 및 생필품 공급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시장의 가격이 하락하는 등 시장이 안정세를 찾게 되고 시장의 경기도 보다 활기를 보일 가능성이 있지만, 사회 전반에 대한 통제가 강화될 수 있다는 점이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경제강국’ 진입의 성과가 특권층이 모여 사는 평양시에 집중되었다는 사실이 사회적 갈등과 정부의 정부 정책에 대한 거부감 또는 불신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화폐개혁 이후 잘사는 사람과 못사는 사람 간의 격차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평양에 편중된 국가적 지원은 강성대국의 표본을 제시하겠다는 당국의 의도와는 달리 지방주민들의 새로운 지도자에 대한 불만을 증폭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 임강택·남북협력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다. 사회동향

2011년 한 해도 북한 주민의 생활은 어렵고 힘들었다. 만성적 식량 부족과 함께 화폐개혁(2009.11) 이래 계속되고 있는 물가 폭등¹은 북한주민의 생활고를 지속적으로 심화시키는 주요인이다. 군량미 징수, 구제역 확산, ‘민족최대의 명절’ 행사 준비 등도 주민들의 생활고를 가중시킨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세계식량계획(WFP) 등 국제사회의 쌀 지원의 지연 및 식량지원량의 감소로 인해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2011년 6월 태풍과 7월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도 북한 주민들의 생활을 힘들게 하였다. 집중호우로 인해 황해도, 강원도, 함경도 등 각지에서 주택과 농경지를 비롯하여 공공건물, 공장, 도로, 다리, 철길, 제방이 파괴·매몰·침수되어 주민들이 균중적 복구사업에 나서야 했으며, 황해도에서는 수인성 전염병이 급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폐개혁 이후 생활고가 보다 더 심화됨에 따라 2011년에도 북한 주민들 사이에 체제 및 지도자의 권위에 대한 불신과 저항 행태가 심화, 확산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장마당 등지에서 주민들의 돌발적인 저항·소요 사태가 빈발, 확산되고 있으며, 연초에는 대남 선전용 웹사이트

1 대북인권단체(좋은벗들)에 따르면, 최근 북한 전역에서 쌀값이 폭등하면서 평양에서는 2개월 만에 50% 이상 올랐다고 함. 『연합뉴스』, 2011년 11월 10일.

‘우리민족끼리’의 ‘독자마당’ 게시판에 김정일·김정은을 비방하는 내용의 시가 올라와 수 백 명이 읽은 후 삭제되기도 하였다.

북한 당국은 2011년 한 해에 걸쳐 언론 매체와 사상교양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김정은 후계구도의 공고화를 꾀하였다. 연초에 노동신문은 ‘온 세계에 앞서나가기’라는 제목의 ‘정론’을 통해 김정은의 능력 및 지도자로서의 이미지를 홍보, 과시하였다(1.7). 정론에서는 김정일 위원장이 김정은과 함께 시찰한 자강도 희천연하기계종합공장을 ‘CNC’(컴퓨터수치제어) 실현의 세계적 본보기로 소개하였는 바, 북한에서 ‘CNC’는 김정은을 상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조선중앙텔레비전은 김정은 생일(1.8)에 ‘위대한 령장을 모시여’를 방영하였으며, 방송에서는 김정일 위원장과 김정은에 대한 충성 편지 등을 소개함으로써 후계세습의 정당화 및 공고화를 꾀하였다. 2011년 7월에는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기관지 ‘청년전위’(7.31)에 ‘전설적 위인이신 김대장 선군의 충대 높이 드셨다’라는 제목으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인 김정은을 찬양하는 글을 실었으며, 이는 후계구도 기반 강화에 있어 청년세대 역할의 필요성 및 중요성을 적극 고려하고 있음을 시사하였다. 또한 북한은 김정일 위원장의 생일 행사 기간에 김정은의 위대성 강연, ‘충성의 편지 이어달리기’ 등을 진행하였으며, 평양시 10만호 살림집 건설 사업과 김일성 생일 ‘태양절’ 행사를 김정은이 주도한 것이라고 선전하는 등 세습 후계자 김정은의 권위 및 위상 강화를 꾀하는데 주력하였다.

2011년에 들어서면서 북한은 국경지역을 중심으로 비사회주의 감시 및 통제를 보다 강화하였으며, 이는 세습 후계자 김정은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은이 직접 중앙당 행정부 책임자를 앞세워 비사

회주의 단속을 강화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북한 당국은 가족단위의 탈북, 귀순 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국경지대 등에 대한 ‘탈북경계 태세’를 대폭 강화하였으며, 남한, 중국 등 외부와의 전화통화도 강하게 통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김일성 탄생 100주년이 되는 2012년 4월까지 비사회주의 현상을 근절시키기 위한 검열조직인 ‘100돌 그루뻬’를 신설하였으며, ‘남한풍’ 등 외부사조 유입을 김정은 후계구도의 위해요소로 지목하고 특별팀을 구성하여 주로 북·중 국경지역 주민과 해외파견 근로자(공무원, 상사원 등)들을 집중 검열 및 단속을 하고 있다고 한다.

북한 당국은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에서의 반정부 시위 관련 소식이 주민들에게 유입, 침투되는 것을 우려하여 주민 단속 및 감시를 보다 강화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 당국은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비롯한 각종 IT기기에 대한 규제 조치를 강화하는 한편, 리비아 등 민주화 시위가 일어난 지역 주재원들의 귀국 불가 조치를 내렸으며, 이들 지역에 대한 근로자 파견도 보류 내지 금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폭동 및 시위 진압 관련 기구를 창설하고 진압용 장비를 대량 구입한 것으로도 알려지고 있다.

2011년에도 북한은 문화·관광 교류의 활성화를 통한 북·중관계의 강화를 꾀하였으며, 특히 미국과는 언론 및 체육 분야 교류의 활성화를 통하여 관계개선을 모색 및 추구하였다. 2007년 이후 두 번째로 북한 태권도 시범단의 공연(6.9~16)이 미국 보스턴과 뉴욕 등지에서 있었으며 북한은 이 공연을 ‘조·미(朝·美) 친선, 화해, 평화의 기회’라고 평가하고 미·북관계의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6.27). 또한 북한 조선중앙통신과 미국 AP통신이 AP통신 평양지국 개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으며, 북한 당국은 AP통신의

평양지국 개설이 미·북관계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다.

식량난 등 북한의 경제난이 지속되는 한 새해에도 북한 주민들은 생활고를 겪게 될 것이다. 특히 김정일 위원장의 사망으로 인해 새해 들어서에는 김정은 후계체제 공고화 및 우상화가 보다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주민들의 물질적·정신적 고통이 배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 당국은 사상교양 등을 통해 “강성대국의 문이 열리는 내년에는 정상적인 식량배급이 가능하다”라고 역설하고 있으나 주민들의 대부분은 이를 믿지 않는다고 한다. 사실상 북한은 연말까지도 국제사회에 식량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바, 북한 당국이 2012년의 식량배급 정상화를 강조하는 것은 생활고에 시달리는 주민들을 위문하고 주민 불만을 일시적으로 무마하기 위한 조치라고밖에 볼 수 없다. 2012년에 들어서도 주민들의 생활고가 지속되고 사회통제가 강화됨에 따라 체제 및 지도자의 권위에 대한 불신과 저항이 확산, 심화될 것이며, 이는 특히 김정은 후계체제가 안착하지 못하고 사회불안정성이 높아질 때 더욱 그럴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 당국은 ‘재스민 혁명’의 여파를 차단하는 것에 더욱 주력할 것이며, 이를 위해 국경지역을 중심으로 주민통제를 강화하고 각종 IT기기에 대한 규제 조치 및 사상교양을 보다 더 확대 및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2년에는 사회·문화부문에서의 김정은 후계체제 공고화 및 우상화 작업이 보다 본격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시·소설을 비롯한 예술 작품의 대량 창작 및 배포를 통해 ‘영도자’ 김정은의 위대성과 권위를 높이는 등 우상화 작업이 적극화될 것이며, 다양한 조직 단위의 사

상교양을 통해 후계자 김정은의 통치 능력 및 업적을 과시할 것이다. 또한 무상의무교육제, 무상치료제 등 사회주의적 복지제도 기능을 정상화함으로써 주민들의 국가·사회 및 체제에 대한 불만과 불신 해소에 주력하는 한편, 복지제도 기능의 정상화를 후계자 김정은의 업적 및 통치 능력으로 과시할 개연성도 높다. 2012년에도 북한은 국제사회의 지원 및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부정적인 체제 이미지 개선에 주력할 것이며, 이를 위한 일환으로 사회·문화부문에서의 체제 개방을 확대하고, 특히 미국과의 사회·문화 교류를 보다 활성화시키고자 노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화·관광 등 사회·문화 교류의 활성화를 통한 북·중 유대관계 강화에도 주력할 것이다.

- 임순희·북한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라. 군사동향

2011년 북한의 군사 분야 추세를 ① 대남무력도발 징후, ② 비대칭적 군사력 확장, 그리고 ③ 군부의 정치적 영향력 증대 등 세 부문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김정일 사망(12월17일)이 이들 각 부문에 끼칠 수 있는 영향을 살펴보면서 2012년 군사 분야 정세 변화를 전망해 본다.

2010년 북한 군부는 서해안 해안포사격, 천안함 폭침, 그리고 연평도 포격 등 일련의 무력도발을 감행하여 한반도 정세를 극도의 긴장상태로 몰아갔다. 그러나 2011년에 들어서자 “북남 사이에 대화와 협력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한 신년 공동사설을 필두로 연이어 공세적으로 대화를 제의하며 급격한 분위기 반전을 꾀하였다. 한반도 긴장완화 및 남북 화해를 6자회담 재개의 전제로 강

조한 1월 미·중정상회담의 영향하에 2월 8~9일 개최된 ‘고위급군사 회담을 위한 예비회담’이 천안함 폭침 등 의제 선정 문제로 실패하자 북한은 점차 강경한 태도를 취하는 모습을 보였다. 5월 3일에는 한국 군의 동해 및 서해상 포격 훈련을 ‘북침연습’ 등으로 강도 높게 비난하더니, 6월 3일에는 김일성 사진 표적지 사용 등을 빌미로 군사적 보복 등을 운운하며 긴장 수위를 높였다. 전형적인 강온 양면정책의 구사로 한국을 압박하며 2010년의 군사도발로 야기된 고립과 제재국면 탈피를 노렸다.

다른 한편, 서해상 NLL 주변에 또 다른 도발의 기획 의도를 짐작하게 하는 징후들이 속속 드러났다. 황해도 고암포에 공기부양정 발진 기지를 완공하여 2012년 초에는 함정 및 부대 배치를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011년 9월 국방부 발표에 따르면, 잠수정 및 반잠수정 침투 훈련도 예년보다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연평도 포격을 감행했던 개머리 진지도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10월 및 11월에는 폭격기를 활용하여 서해상에서 공대함 미사일 발사 훈련을 하였고, 11월 및 12월에는 김정일 부자가 서해 NLL 인근 공군부대 등을 방문 현장 지도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해안 재차 도발시 직면할 수 있는 수상 및 공중 전력의 약세를 만회하기 위한 모종의 계획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여길 수 있다. 북한이 지대공 미사일을 백령도 북방 지역으로 재배치하였다는 점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북한의 군사적 도발 태세의 준비는 상수라 볼 수 있다. 김정일의 사망으로 국제정세 변화 등에 반응하여 사전에 잘 조율된 방식으로 군사적 도발이 감행될 가능성은 줄어들었으나, 예측 불가능한 가변적 형태로 도발이 즉흥적으로 나타날 확률은 오히려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이 2010년 이후 보다 대담한 방식으로 물리적, 선언적 도발을 감행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소위 북한의 비대칭 전력상의 압도적 우세가 작용하고 있다. 비대칭 전력의 중핵은 핵전력이라 할 수 있다. 2011년 북한이 핵 또는 장거리 탄두 미사일 실험을 하지는 않았지만, 핵물질의 무기화에 더욱 다가갔던 것으로 여겨진다. 2011년 초 증보 발행된 미 의회조사국 보고서에도 북한이 현재 4~7개의 핵탄두 제조가 가능한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으며, 2011년 일본 방위백서에서도 북한이 가까운 장래에 소형화 탄두화에 성공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북한은 연평도의 포격사건이 발생한 2010년 11월에는 북한을 방문한 미 물리학자 해커 박사 일행에게 고농축우라늄 시설을 공개한 바 있다. 고농축우라늄을 재료로 하는 핵폭발 물질 생산에도 더욱 다가간 것으로 추론된다. 핵물질 무기화 수준의 진전을 바탕으로 북한은 한반도 긴장 조성을 위하여 공공연히 핵공갈을 자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1년 2월 김영춘 인민무력부장은 로버트 게이츠 당시 미 국방장관에게 보내는 서신에서 “이대로 놔두면 한반도에 핵잠화가 일어날 것”이라며 협박하였으며, 3월 1일자 노동신문 논설을 통해 “전쟁이 터지면 초래될 것은 핵잠화뿐”이라며 한국을 압박하였다.

핵무기 개발 이외 부문에서도 북한은 비대칭 전력 증강에 열을 올리는 모습을 드러냈다. 2011년 6월에는 성능이 대폭 향상된 KN-06 단거리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였다. 수도권에 생화학 무기 또는 방사능 물질을 투발할 수 있는 능력을 더욱 향상시키게 된 것이다. 또한 북한은 사이버 테러 능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킨 것으로 보인다. 2011년 5월 한국 검찰의 발표에 따르면, 2010년 7월과 2011년 3월에 발생한 디도스 공격도 정찰총국 산하 해킹부대인 212국에 의해 자행되었다고

한다. 또한 GPS 교란 등을 위한 전파전 능력 증강에도 상당한 진전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는데, 유사시 한국의 방위 능력에 심대한 타격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북한은 2010년 9월 당대표자회 등을 통해 비교적 젊은 세대를 주축으로 하는 신군부 세력을 후계자 김정일을 보위할 주축으로 부상시킨 바 있다. 그런데 이들 신군부 세력도 또한 비대칭 전력의 육성 및 전략 개발에 주력해온 집단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리영호 총참모장은 그물망식 포격 전술의 창안자이자 비대칭 전력 증강을 통한 한·미 동맹 견제 전략을 주창해온 자이다. 정명도 해군 사령관, 김격식 전4군단장, 김영철 총정찰국장 등도 비대칭 전술 개발 운영의 주축으로 알려진 바 있다. 비록 김정일의 사망으로 돌발적 요소가 가세하긴 했지만, 김정은과 그의 친위사단의 입장에서 핵 개발 및 비대칭 전력 확장이라는 김정일의 유업을 쉽사리 단기간에 뒤엎기는 곤란할 것이다. 김정일 장례위원단의 명단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들 신군부 세력이 건재한 것으로 보이며 이들이 비대칭 전력 확장에 걸린 자신들의 기득권을 포기한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운 일이다.

2011년은 신군부 세력이 정치적으로도 영향력을 확장하면서 남북관계는 전시와 평화 시기의 구분이 모호한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통전부 등 당 및 내각의 대남공작 부서가 후계과정상의 부침을 겪으면서 숙청 등으로 세력이 크게 위축된 반면, 신군부 세력은 단지 군사 부문이 아닌 대남 및 외교 부문에까지 관여하게 되면서 남북관계의 운영이 군사 전략의 일부분으로 전략하는 양상이 전개되고 있다. 2011년 5월에 있었던 남북 간 비밀접촉에서도 통전부나 외교부 인사들이 아닌 국방위 소속 인사들이 참여하는 한편, 비밀접촉 자체를 폭로하면서 남북관계

진전을 좌초시킨 바 있다. 북한의 권력세습 과정은 숙청과 세대교체로 특징지을 수 있는 정치적 불확실성의 연속으로 볼 수 있으며 생존을 위한 과도한 충성경쟁과 강경파의 득세가 예상되는 시기이다. 강경파 신군부의 약진은 북한의 대외 및 대남 전략의 군사화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김정일의 급작스런 죽음으로 장성택 등 당에 기반을 둔 민간 정치인들의 영향력이 확장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들 역시 신군부의 협조없이 후계과정을 안정되게 마무리 짓기는 어려운 일이다. 신군부의 정치적 입김이 오히려 거세질 수도 있는 것이다.

북한 정권에 있어 2012년은 김일성 출생 100주년 등을 기념하여 소위 ‘강성국가’ 진입을 보여주어야 할 상징적으로 중요한 시점이다. 김정일의 급작스런 사망으로 축제기간으로 설정되었던 이 기간이 장례 및 애도 기간으로 급변함에 따라 김정은 홀로서기의 시점이 더욱 빨라지게 되었다. 권력 세습을 앞두고 경제 등 인민생활과 직결된 부문에서 이렇다 할 지적 쌓기에 실패한 김정은에게 있어 군사 부문에서의 업적증명은 거의 유일한 권력세습 정당화 구실이라 할 수 있다. 핵무기 보유 국가로서의 지위 획득이 강성국가의 한 지표로 기능할 수 있는 반면, 무력도발을 통한 전쟁 분위기 고조와 남북 긴장 조성은 내부 분열을 통제하면서 권력 세습을 동인할 매개체로 역할 할 수 있다. 북한 정권의 입장에서 큰 외교적 승리나 대규모 외부 경제 원조 획득과 같은 가시적 성과만이 군사적 위용 과시를 어느 정도 대체할 수 있는 업적으로 여겨질 것이다. 더욱이 김정일 사망으로 약화된 군부에 대한 통제력을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군부보다도 더 강경한 군사주의 방향으로 경도될 가능성도 있다.

김정일 사망 전 미·북 간에는 6자회담 재개를 둘러싼 줄다리기가 진행

중이었다. 2011년 7월 뉴욕 접촉에 이어 10월에 있었던 제네바 고위급 회담을 통하여 우라늄고농축 프로그램의 유예 및 사찰 문제가 6자회담 재개를 결정한 중요한 이슈로 부각된 바 있다. 김정일 사망으로 당분간 미·북 간 접촉이 정지 상태에 머무를 수밖에 없을 것이나, 양국은 일정 기간 관망 후(특히, 미국으로서는 김정일의 정권 및 군부 장악력을 면밀히 검토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조정기를 거쳐 협상이 재개될 수 있다. 김정일 사후 협상을 통해 국제적 고립과 제재 국면을 탈피하면서 부차적으로 국제사회로부터 대화상대로서 김정은 정권의 암묵적 인정과 경제 원조 등 지원을 얻어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외교적 목적으로 부각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양국 접촉이 지속되는 한 북한이 핵 및 미사일 실험을 강행하거나 한국에 도발을 자행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2012년 3월에 열리는 서울 핵안보정상회담을 앞두고 핵개발과 관련된 행위를 감행하는 것은 지나치게 도전적이며 이는 거의 유일한 우방이라 할 수 있는 중국의 분노를 초래할 수 있는 극단적 모험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김정은에게 김정일이 없는 상황에서 중국의 지지를 획득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애초기간으로 진행될 상반기 중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은 매우 낮아졌다.

그러나 미·북 간 협상이 북한의 기대와 달리 좌초된다면 핵 및 미사일 실험을 감행할 가능성이 보다 농후해진다. 보다 진전된 북한의 핵능력을 증명함으로써 미국과 한국을 압박해 전쟁위기를 고조시키려 할 수도 있다. 위기에 몰린 김정은이나 신군부 세력이 긴장 조성을 통해 난관을 극복하려 들 수 있다. 예정된 중국과 러시아에서의 리더십 교체과정은 북한이 핵실험 등을 감행하려 할 경우 이를 실질적으로 억제할 국제적 제약이 약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애도 시기가 끝나고

경제적 피로와 사회적 허탈감이 누적될 하반기가 되면 군사적 도발을 감행하여 이를 회피하고자하는 유혹이 커질 수밖에 없다. 군부 강경파 세력의 득세가 무력 도발을 유인할 수 있는 한편, 역으로 무력 도발을 통하여 이들 신군부 세력이 정치적 영향력 확대를 꾀할 수도 있다. 즉, 미·북 간 협상 추이와 북한 신군부 등 강경 세력의 영향력을 결정할 수 있는 북한 내부 정치 변화는 북한의 군사적 도발 가능성을 좌우할 주요 변수로 예의 주시해야 할 것이다. 특히 2012년 하반기에는 한국과 미국에서 대선이 치러진다. 한·미 양국의 북한 억제 능력은 저하되는 반면, 무력도발 등 북한의 공세적 도전은 큰 파급력을 발휘할 수밖에 없다. 하반기 북한의 군사적 움직임에 주의를 집중해야 할 이유이다.

- 김진하·북한연구센터 부연구위원

2. 대외관계

가. 미·북관계

새해 벽두부터 북한은 유화적인 태도로 돌변하여 남북대화와 미·북 대화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2011년 1월 뉴욕에서 북한의 한성렬 유엔 차석대표가 로버트 킹 북한인권특사를 만나 2008년 영변 핵시설의 냉각탑 폭파 결정에 따라 지원을 결정한 50만 톤 중 모니터링 문제로 중단되었던 33만 톤의 식량을 지원해줄 것을 요구했다. 북한은 모든 모니터링 조건을 수용하겠다고 했다. 대남 대화공세 속에서 1월 11일 북한은 ‘현사태 타개의 근본열쇠-조미평화협정’이라는 노동신문 논평을 통해 “지난해 유관국들이 북한의 평화협정체결 요구에 응했다면 연평도 포격사태는 없었을 것”이라고 속내를 드러냈다.

2011년 초부터 미국은 긴장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북한과의 대화와 식량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도발을 우라늄농축 프로그램의 공개에 대한 응답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은 중국과의 1월 19일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긴장과 북한의 UEP가 우려 사항이라는 데 동의하고 남북 간 건설적이고 진정성 있는 대화와 6자회담의 필요성에 대해 합의하였다. 6월 7일 싱가포르 상그리라 회의에서 게이트 국방장관이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이 미국 본토에 직접적인 위협이라고 평가한 것은 미국의 대화 필요성을 높였다.

4월 말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하여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박의춘 외무상, 김계관 6자회담 수석대표, 박림수

국방위원회 정책국장 등을 만나 북한의 남북대화 의지와 식량지원 및 모니터링 문제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카터 전 대통령은 방북 후 한국을 방문하여 김정일 위원장의 남북 정상회담 제의를 전달하기도 하였다. 북한의 식량사정에 대해 엇갈리는 평가 속에서 5월 24일 로버트 킹 특사를 단장으로 하는 평가단이 북한의 식량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방문했다. 킹 특사가 28일 귀환 당시 북한에 6개월간 억류되었던 미국 시민권자 전용수씨가 동행할 수 있었다.

중국의 중재로 남북 핵회담, 미·북 핵회담, 6자회담이라는 3단계 해법이 나왔고, 7월 22일 발리에서 남북 핵회담이 개최된 직후 7월 28일 뉴욕에서 미·북 간 고위급 회담이 개최되었다. 1차 회담이후 북한과의 대화 분위기는 속도를 내지 못하였다. 9월 21일 북경에서 2차 남북 핵회담이 개최되었고, 이어 10월 23일부터 제네바에서 2차 미·북 고위급 핵회담이 개최되었다. 이들 회담은 남북관계 전망 및 6자회담 재개여부와 관련하여 주목을 끌었으나 제네바 회담을 앞두고 양측의 신경전은 회담의 전망에 그림자를 드리웠다. 미국은 6자회담의 전제조건으로 UEP 중단, IAEA 사찰단의 복귀, 대량살상무기 모라토리엄을 주장했다. 김정일은 러시아 이타르타스 통신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조건없는 6자회담 재개를 주장하였으나 미국은 이를 외면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의 기대와는 달리 2차 회담은 합의문 도출을 하지 못한 채 끝났다. 미·북 양측은 뉴욕채널을 통해 다음 회담일정을 잡기로 했으나 진전이 있었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것 같다. 회담결과에 대해 북한 김계관 대표는 “커다란 진전이 있었다”고 만족을 표시하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길 원했다. 그러나 미국의 반응은 훨씬 냉정했다. 회담 직후 빅토리아 눌런드 미국무부 대변인은 “일부 의견차는 좁혔지

만 돌파구를 찾지는 못했다”고 했다. 북한이 조속한 6자회담 개최를 희망하는 것은 비핵화를 논의하자는 것이 아니라 대북 제재를 완화시키고 식량지원을 얻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 북한은 2009년 2차 핵실험이후 6자회담을 북한의 비핵화가 아닌 평화체제를 논의하기 위한 장으로 주장하여 왔다.

12월 5일 방한한 글린 데이비스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대북 영양지원 의도를 밝혔으나 북한의 변화 필요성을 언급하며 6자회담의 조기 개최에 대한 회의감을 표명했다. 6자회담의 비관적인 전망은 미·북 간 뉴욕채널을 통해서 북한이 우라늄농축의 잠정 중단을 받아들임으로써 급반전되었다. 12월 15일 북경에서 미국의 로버트 킹 북한인권특사와 북한의 이근 국장이 전격 회동하였다. 미국은 매일 2만 톤씩 총 24만 톤의 영양보조식품(비스킷과 비타민)을 북한에 제공하기로 합의하고 12월 22일 3차 미·북회담에 합의하였다.

미·북관계의 급진전 무드는 12월 17일 김정일 위원장의 사망이 19일 발표되면서 주춤하였으나, 하루 뒤 뉴욕채널을 통해 미·북 양측은 대화의 모멘텀을 이어가려했다. 클린턴 국무장관은 북한 주민들에게 애도를 표하며 북한에게 긍정적 신호를 보내기도 하였다.

2012년에도 북한과 미국은 3차 미·북회담 합의의 모멘텀을 유지하려 할 것으로 보이며 부분적인 성과를 거둘 수도 있을 것이다. 북한의 안정에 대한 중국의 적극적 지원은 북한이 자신감을 갖고 좀 더 적극적인 대미 접근을 하도록 할 것이다. 북한은 2012년을 ‘강성대국의 문을 여는 해’로 규정하고 각종 정치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김일성 생일 100주년, 김정일 생일 70주년, 김정은 생일 30주년이 되는 해이다. 북한은 주민들에게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정치행사를 위해 외부로부

터 경제적 지원을 받는 것이 절실하다. 남북관계는 경색되어 있고, 김정일의 중국과 러시아 방문도 큰 성과를 가져오지는 못하였다. 장기적으로 미·북관계의 진전을 정치적 승리로 선전하고 주민들에게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미국입장에서도 대선 정국에서 한반도 안정을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북한의 과도기를 관리할 필요가 더욱 커졌다.

- 최진욱·북한연구센터 소장

나. 북·중관계

2011년은 북·중 양국 간 전략적 이해의 일치가 더욱 공고화된 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중국은 2009년 이래 중국의 부상에 대한 미국의 견제 강화와 김정일 건강위기설로 인한 체제 붕괴에 대한 방지 차원에서 북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왔다. 중국의 북한에 대한 정치·경제적 보장은 2010년 미·중 갈등, 천안함 사건 등 동북아 정세 지형의 불안정성 때문에 더욱 확대되었다. 2011년 역시 중국의 대북한 전략적 보장은 후계 계승에 대한 불안감, 북·중 우호협력조약 재평가, 지속적 경제협력 강화로 나타났다. 명젠주 중국 공안부장이 평양 방문(2.13)시 김정일의 후계 계승에 대한 축하성 멘트를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리커창 상무부총리가 한국을 공식 방문하기 이전에 북한 방문(10.23~25)이 전격 결정되는 등 북한에 대한 정치적 배려가 있었다. 특히 주요 고위급 회담에金正은이 배석해 사실상 중국이 후계 계승에 대해 인정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들이 나오기도 했다. 이 밖에도 양국 간 고위급 인사들이 어느 해 보다 잦은 상호 방문을 통해 정치적 신뢰 관계를 구축

했다. 군사안보적 보장도 뒤를 이었다. 지난 7월 북·중 우호협력조약 체결 50주년 즈음에서 축하사절단 교환, 다양한 기념행사 이외에도 중국 해군훈련 함대가 북한 원산항에 입항하는 상징적인 이벤트가 있기도 했다. 또한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국영 CCTV 보도를 통해 이 조약이 사실상 연장되었다고 발표해 한·미동맹 강화 등 동북아 정세의 변화에 대한 세력균형 차원에서 북한과의 동맹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을 가능케 했다.

이러한 중국의 대북한 전략적 보장은 북한 김정일 위원장의 사망(12.17) 이후 더욱 공식화되었다. 중국은 공식 조전에서 ‘김정은 동지의 영도’를 명기함으로써 북한 후계 계승을 사실상 인정했으며, 후진타오를 비롯한 고위급 지도자들이 발 빠르게 조문 행보를 하는 등 김정일 사후 북한체제의 안정화에 후원 역할을 암시했다.

경제협력 분야는 실질적으로 많은 진전이 있었다. 2011년 6월 장성택 북한 노동당 행정부장과 천더밍 중국 상무부장의 회담 이후 나선경제무역지대와 황금평, 위화도 경제지대 공동개발 및 공동 관리에 관한 협정 및 착공식이 거행되었고, 신두만강대교 및 나진-원정리 간 도로 공사, 다탕(大唐) 발전소 전력 공급 사업 등이 본격화 되었다. 양국 간 교역액도 급증했는데, 2011년 1~9월 간 경제 교류액이 40억 달러를 돌파하는 등 전년 동기 대비 77%이상 상승했고, 대중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33% 급증, 수입은 50% 증가했다. 그러나 북한 수출의 대부분이 광물 자원에 의존한 것으로 알려져, 북한자원의 중국 유출에 대한 우려를 자아내기도 했다. 북한 입장에서는 2012년 강성대국 건설과 안정적 후계구도 구축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외화 획득이 시급했고, 중국 역시 동북개발에 필요한 자원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급속한 광물 채굴

이 진행되었다는 평가이다. 결국 북한은 중국의 지원이 절실했으며, 중국 역시도 동북아 세력균형과 동북개발을 위한 자원 배후지로서 북한이 필요했기 때문에 양국의 이해관계는 2010년에 이어 2011년 역시 더욱 일치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상호 전략관계가 공고화되었다고 분석할 수 있다.

그러나 밀월을 방불케 하는 양국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상호 견제는 2011년에도 지속되었다. 중국은 북한과의 경협을 확대하면서도 자국 기업의 신중한 대북투자를 권고하는 상무부 지침을 발표하고, 북한에 대한 투자에 있어 국가중심보다는 시장원리를 지속적으로 강조했다. 북한 역시 김정일이 전격 북·러 정상회담(8.23)을 추진하는 등 경제의 대중국 의존도 확대 현상의 균형을 맞추려는 노력을 했다.

2012년에도 동북아뿐 아니라 동아시아 국제지형에 있어 미·중 갈등이 2011년과 비슷한 패턴을 보일 가능성이 높고, 이 때문에 중국에게 북한의 전략적 가치는 지속될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중국은 중국 위협론 확산과 미·중 갈등에 대한 부담이 있고, 주변부 안정을 위해서는 최소한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의한 불안정이 발생하지 않기를 희망하고 있다. 또한 김정일 급작스런 사망으로 인해 강성대국 원년 선포의 불확실성, 후계구축의 불안정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중국의 북한에 대한 전략적 관리 정책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 역시도 체제 안정과 경제회복을 위한 재원마련이 시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중국을 후견국으로 활용하는 전략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중국의 이해에 부합하는 일정 정도의 제스처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은 중국의 내정간섭 확대 및 경제 의존도가 높아지는 것을 경계하기 때문에 다른 후견국을 찾는 작업을 동시에 진행할

것이고, 동북아 정세 변화에 따라 또 다른 군사 도발적 지정학 게임을 벌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 이기현·국제관계연구센터 부연구위원

다. 북·일관계

2011년 3월 사상 초유의 쓰나미와 대지진, 그에 따른 후쿠시마 원전 사태 대응 등과 관련, 간 나오토 총리 및 내각의 무능함에 일본 국민들의 실망과 분노가 분출하였다. 따라서 간 나오토 내각은 쓰나미와 대지진, 후쿠시마 원전사태 등의 수습과 복구 등에 노력을 기울이면서 민심 수습과 지지도 상승을 위한 국내정치에 노력을 기울여야 했다.

간 나오토 내각은 새로운 대외정책의 제시보다는 미·일 갈등의 해소와 미·일동맹의 복원, 한·일관계의 신뢰 강화 등을 위한 조치를 취하면서, 대북정책은 미·일동맹과 한·미·일 공조체제를 기반으로 전개되었다. 다시 말해서, 간 나오토 총리가 김정일 국방위원장 및 북한 정권에 대해 예전부터 비판적이고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토야마 내각의 대북 제재 노선을 계승하면서, 한·미·일 공조를 기반으로 전개되었다. 따라서 북한은 노동신문 등 언론 매체를 통하여 간 나오토 총리에 대해 매우 비판적 태도를 표명하였다. 북한은 노동신문을 통하여 하토야마 내각의 출범 전후 일본에 유화적으로 접근했던 것과 달리, 간 나오토 총리와 내각에 대해서는 매우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였다. 북·일관계는 냉각상태를 벗어나지 못했다.

그러나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위한 환경 조성과 관련국의 외교전이 전개되면서 마에하라 세이지 외무상은 납치문제의 진전을 위해 ‘북한

과의 대화 채널'의 구축을 지향한 북·일 접촉을 시도하였고, 게다가 2011년 7월에 접어들면서 북·일 양자 간에도 접촉이 이루어졌다. 일본은 납치문제가 최우선 현안인 것에 비해서 북한은 조총련 중앙본부의 압류문제 해결이 가장 시급한 현안이며, 나아가 국교정상화를 통한 식민지·전쟁 배상·보상금을 확보하는 것이다. 2011년 7월 21~22일 창춘에서 나카이 전 납치문제담당상과 송일호 북·일 국교정상화 담당 대사가 만나 납치문제, 조총련 중앙본부의 압류문제에 관해 협의하였는데, 별다른 성과없이 막을 내렸다. 요컨대, 간 나오토 내각에서 납치문제와 조총련 중앙본부의 압류문제에 관한 협의 등을 하기 위해 북·일 양자 간 접촉을 하였지만, 북·일관계에 진전은 거의 보이지 않았다.

간 나오토가 총리가 사임하고, 2011년 9월 2일 노다 요시히코 총리와 신임 내각이 출범하였다. 그런데 노다 정권은 출범 직후의 60~70%대의 국민지지율이 2011년 11월에 접어들면서 50%이하로 하락하였다. 노다 정권으로서는 50%대 이상의 국민 지지율을 어떻게 확보·유지하는가가 가장 중요한 정치적 과제이다. 즉, 노다 정권으로서는 대지진·쓰나미, 최악의 원전 사고 및 후유증을 성공적으로 수습하고 피해를 복구하는데 최역점을 두면서,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에서 유래되는 경제 여파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이 최우선 정책과제이다.

그러므로 노다 정권도 간 나오토 정권처럼 새로운 대외전략과 대북 전략을 전개할 여유가 그다지 없다. 게다가 노다 총리가 외교 분야의 경험이 적고, 겐바 고이치로 외무상은 보수 성향으로 외교 분야에서 뚜렷한 경험이 없다.

노다 총리는 2011년 9월 21일 뉴욕 미·일 정상회담에서 북한 핵문제에 대해 미국과 긴밀하고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하였고, 10월 19일

서울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북한의 핵 폐기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전에 긴요하다는 인식아래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한국과의 긴밀한 공조를 계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노다 총리는 2011년 11월 15일 월드컵 예선전 북·일 축구 시합을 앞두고, 에토 세이시로 중의원 부의장 등 초당파 의원모임인 ‘일·북 국교정상화 추진의원 연맹’ 소속 의원들이 동년 11월 8~12일에 평양을 방문하는 것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표명하였다. ‘일·북 국교정상화 추진의원 연맹’ 소속 의원들의 방북은 불발로 끝났다.

이처럼 노다 정권의 등장 이후, 북·일관계는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북한이 일본에게 제재의 완화 또는 해제를 요구하고 있지만, 북·일관계는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노다 정권의 대북정책은 미·일동맹의 강화를 기반으로 한·미·일 공조를 중시하며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6자회담의 재개와 관련, 미·북 대화의 진전에 따라 북·일 접촉도 이루어 질 수 있다. 노다 정권에서 미·북 대화의 진전에 응하여 북·일 접촉을 시도할 경우, 정치권에서는 마에하라 세이지 민주당 정책조사회장의 일정 부분 역할을 기대할 수도 있다.

- 배정호·국제관계연구센터 소장

라. 북·러관계

9년 만에 양국 정상회담이 러시아에서 개최되었고, 러시아 대외정보국장이 이례적으로 방북하였다. 러시아 정부는 2011년 전반기에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실질적 조치를 북한 측에 촉구함으로써 한·미의 입장에 동조하는 듯하였다. 그러나 하반기부터 ‘조건 없는 6자회담 재개’라

는 북한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 북한 핵실험(2009.5)으로 무기한 연기되었던 양국 간 경제협력위원회가 개최되었고, 가스관과 철도 연결 등 남·북·러 3각 경협문제가 집중 협의되었다. 북·러 간 경제협력의 장애요인인 북한의 대러 채무문제는 2011년에도 해결되지 못했다. 러시아 정부는 직간접적으로 대북 인도적 지원을 하였다.

김정일은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의 초청을 받아 바이칼 호수 인근에 있는 부랴티아 자치공화국 수도 울란우데의 군부대에서 메드베데프 대통령과 정상회담(8.24)을 가졌다. 이번 북·러 정상회담은 그동안 약화된 러시아의 대북 영향력 모색, 블라디보스토크 APEC 정상회담(2012.9)을 앞둔 상황에서 북한의 대남 도발 방지를 위한 대북 경협 확대와 지원, 북한의 안정적 3대 세습을 위한 대러 지지 확보, 3각 협력을 통한 북·러 양국의 경제실익 도모 등이 개최배경이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금번 정상회담은 양국 간 전통적인 친선협조 관계의 복원, 6자회담 재개에 대한 러시아의 북한 입장 지지, 러시아로부터 북한의 다양한 정치·경제적 지원 확보, 남·북·러 가스관 건설을 위한 3국 특별 위원회구성 제의, 북한의 대중 편향정책 완화 등으로 평가될 수 있다.

김정일은 프라드코프 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러시아 대외정보국(SVR) 대표단을 접견(5.17)하였다. 이들은 인도적 지원, 경제 프로젝트, 북핵에 관한 회담을 했다고 전해지고 있으나, 튀니지와 이집트에서의 재스민혁명(1.14) 이후 북한에서 유사한 사태의 방지책 등에 대한 협의를 했을 가능성이 크다.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김정일에 북한의 수해를 위로하는 전문(8.2)과 광복 66주년을 맞는 축전(8.15)을 보냈다. 보로다브킨 외무차관은 주러 북한대사관에서 열린 북한정권 창건 63주년(9.9) 기념연회(9.6)에서 행한 축사를 통해 “조선반도의 안정을 보장하고 호상

신뢰를 강화하는데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하였다. 김정일은 방북중인 코제먀코 아무르주 주지사를 접견(10.20)하고 정상회담 여정 도중 ‘부레이 발전소’ 방문시 환대한 데 대해 사의를 표명했으며, 코제먀코 주지사는 아무르주가 정상회담 합의정신을 실현하는데 앞장설 것을 밝혔다. 김정일 급사(12.17)와 관련,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김정은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조문을 보냈고,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그의 사망이 양국 관계를 손상시켜서는 안된다고 말했다(12.19).

안보·군사면에서, 보로다브킨 러시아 외무차관은 외무부 간 정례협의회 참석을 위해 평양을 방문(3.11~14)하여 박의춘 외무상,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 등과 면담하고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북한이 핵무기 생산 및 실험 중단과 우라늄농축 시설에 대한 국제사회의 사찰 수용 등과 같은 실질적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튿날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조선중앙통신 기자와 문답을 통해 보로다브킨 차관의 방북결과를 전하면서 “전제조건 없이 6자회담에 나갈 수 있고 6자회담에서 우라늄 농축문제가 논의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3.15).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북한이 실질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조건 없는 6자회담 복귀 입장을 ‘긍정적인 신호’로 평가(3.16)하였다. 더욱이 그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러·ASEAN 장관회담의 틀 내에서 박의춘 북한 외무상과 회동하고 기자회견(7.22)에서 러시아는 사전 전제조건 없이 6자회담을 재개할 준비가 돼 있다는 북한의 확인된 입장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올란우데 북·러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전제조건 없는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에 의견을 같이함으로써 러시아가 북한의 기본입장 지지로 완전히 돌아섰다.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은 모스

크바를 방문해 데니소프 외교부 제1차관 및 보로다브킨 차관과 회동(10.28)하고 제네바 미·북 대화(10.24~26) 결과를 설명하는 한편, 적극적인 외교협력을 계속하기로 하였다. 한편, 러시아 외무부는 공보실 명의의 논평(12.1)을 통해 “경수로 건설과 그 연료 보장을 위한 저농축 우라늄 생산을 빠른 속도로 진행하고 있다는 북한의 담화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면서 핵 프로그램 중단과 NPT 체제로의 복귀를 강하게 촉구하였다.

또한 8월에는 시덴코 러시아 동부 군관구 사령관을 단장으로 한 러시아군 대표단이 합동군사 훈련 등 양국의 군사협력을 재개하는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방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한 답방으로 김민식 북한 동해함대 사령관 해군소장이 러시아 태평양함대를 공식 방문(10.20~27)하였다. 그는 미사일 구축함과 디젤엔진 잠수함 바르사비얀키를 시찰하고 태평양함대 고위인사들과 회동했으며 캄차카반도 군부대를 방문하였다.

경제면에서, 북·러 간 통상경제 및 과학기술 협력위원회(경제협력위)가 제4차 회의(2007.3) 이후 북한의 2차 핵실험으로 중단되었다가 평양에서 개최(8.26)되었다. 제5차 회의의정서가 체결되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다. 2011년 러시아는 남·북·러 가스관 연결사업에 적극성을 보였다. 프라드코프 대외정보국 국장과 김정일의 평양 회담(5.17)시 남북한 간 철도와 가스관 연결 및 송전선 설치 문제 등이 협의되었다. 이후 러시아 국영가스 기업인 가즈프롬 대표단이 방북(7.4~6)하였고,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광복 66주년을 맞는 축전(8.15)을 통해 가스·에너지·철도 분야에서의 3각 협력에 대한 북한의 적극적인 사업 협조를 처음으로 당부하였다. 김정일의 러시아 방문 기간에

특별열차를 함께 타고 그를 수행했던 이사에프 러시아 극동 연방관구 대통령 전권대표는 “김 위원장은 만일 러시아와 남한이 천연가스 공급과 관련한 협정에 서명하면 북한은 가스 수송관 건설을 위해 영토를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8.26). 이에 따라서 가즈프롬은 북한 석유산업성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프로젝트를 위한 실무그룹을 구성하기로 합의(9.15)하는 한편, 한국의 가스파이프라인 실무회사인 한국가스공사(KOGAS)와 이 프로젝트에 대한 로드맵을 체결(9.15)했다.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사용권을 확보한 나진항 3호 부두의 개조공사를 2011년 9월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연해주의 하산역과 나진을 잇는 52km 철로의 교체와 기차역 개보수를 완료하고 시범열차 운행행사가 나선시 두만강역 지구에 있는 ‘조·러 친선각’ 앞에서 열렸다(10.13). 북한이 블라디보스토크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도로 확장 및 호텔·아파트 건설 등에 약 3,000명의 노동자들을 파견하고 있어 건설노동자 송출 특수를 맞고 있다. 북한은 매년 반복되는 식량난 극복을 위해 러시아 극동 여러 지역에 수십 만 ha의 농지를 임대해 콩, 감자, 곡물, 채소 등을 재배한 뒤 이를 북한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와 관련 북한 농업성 대표단이 아무르주를 방문해 주정부 인사들과 협상(9.1)을 벌여 1ha당 연 50루블(약 1,800원)에 농지를 임대하는 문제를 논의하였다. 또한 아무르 주지사가 방북하여 북한 무역성과 무역경제협조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10.18)하였다. 러시아는 6월부터 약 110억 달러에 달하는 북한의 구소련 채무에 대해 협상을 했으나 북한이 주장하는 채무탕감과 관련한 최종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다. 러시아 외교통부가 주러 북한 대사관 역내에서 불법 카지노 시설이 운영된 혐의와 관련 김영재 북한 대사를 외교부로 불러 항의각서를 전달

(4.18)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적 지원면에서, 세계식량계획(WFP)의 대북 식량지원 사업이 자금난으로 위축된 상황에서 러시아가 이 사업에 6,200톤의 밀가루를 지원하였다. 또한 북한의 요청으로 흥남항과 남포항을 통해 밀가루 5만 톤을 지원(8.19~11.10)하였다.

2012년 초 러시아 정부는 대통령 특사를 평양에 파견하여 김정일 사후 북한과 정상적인 관계를 발전시킬 용의가 있다는 김정은에 대한 메드베데프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할 가능성이 크다. 러시아 대선에서 메드베데프 현 대통령보다 민족주의 성향이 강한 푸틴이 재집권할 경우, 미·러관계의 갈등으로 북·러관계가 더 강화될 전망이다. 북한의 '강성대국 원년'과 러시아에서의 정권교체를 맞아 양국 간에 고위 축하사절단과 공연단의 상호방문이 이루어질 것이다. 러시아는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경주하면서도 '전제조건 없는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라는 북한의 주장을 계속 지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국 간 군사협력이 강화되어 초보적 수준의 해상구조 공동훈련이 가능할 수도 있다. 경제면에서는 러시아 가스관 연결뿐만 아니라, 북한으로 가스관 지선 건설과 가스를 이용한 발전소 건설 사업 등에 관한 실무협의를 본격화될 전망이다. 북한은 블라디보스토크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약 3,000명의 건설노동자들을 추가 파견할 것이며 아무르주 수력발전소와 철도시설 건설에도 노동자들을 송출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양국 간에는 러시아 극동지역에서 북한 노동자 초청, 에너지·철도 분야 협력, 농지 임대, 목재가공 등의 협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 여인곤·국제관계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3. 대남동향

북한의 2012년 대남정책 전망의 준거로 김정일 사망에 따른 북한 내부 상황 추이, 김정은의 대남정책 성향, 그간의 대남정책 패턴, 한·미의 대북정책과 선거정국 양상을 들 수 있다. 그러나 가장 결정적인 변수는 역시 김정일 사망이라는 내부정세의 취약성일 것이며, 내부가 불안해지면 대외관계는 최소주의로 나갈 수밖에 없다. 북한은 이미 예고한 ‘강성대국’ 진입 행사에다가 뜻밖의 김정일 사후처리 문제가 겹쳐졌으며, 다급해진 김정은 권력기반 다지기 등 내부 문제 해결을 위해 2012년 내내 매우 분주할 것이다. 이런 입장에서 대남·대외적으로는 ‘부상당한 동물’처럼 몸을 도사릴 것이다.

김정은의 남북관계 관리역량은 일천하다. 북한은 김정은의 ‘대담성’과 ‘군사적 지략’을 선전해 왔고, 천안함·연평도 도발은 김정은의 발상일 가능성이 높다. 김정은의 대화와 협상을 통한 남북관계 관리 역량은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 김정일 사망으로 권력층 분위기는 감성이 지배하고 맹목적인 충성기제가 발동할 것이며, 대남정책의 균형추 역할은 더욱 취약해졌다. 이런 점에서 북한은 불리하다고 판단되면 대남정책에 물리적 수단을 동원할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

북한이 그간의 대남행태 패턴을 반복한다면 2012년 들어 수개월은 다시 관망기로 접어드는 시점이 된다. 2011년 들어 북한의 대남행태는 대화요구 → 관망 → 고강도 위협·비난 → 관망 → 고강도 위협·비난 재개의 과정을 거쳤다. 북한은 연초부터 한 달여 동안 남한에 대해 집중적인 대화공세를 전개했다가, 남북 군사실무회담(2.8~9)이 결렬된 이후 낮은 강도의 대남 비난과 함께 정세를 관망하는 태도를 보였다.

5월 말에 남한의 한 예비군 훈련 과정에서 김정일 부자의 초상화를 표적지로 한 사격훈련 사실이 알려지자 ‘특대형 도발’이라면서 7월 초순까지 한 달여 동안 ‘전군·전민의 보복성전’을 위협했다. 이후 북한은 한 동안 대남위협 수위를 낮추다가 11월 하순 연평도 포격 1주년 즈음 실시한 남한의 군사훈련을 명분으로 ‘청와대 불바다’(11.24)를 거론하는 등 12월에 들어서도 대남위협을 지속해왔다.

한편, 한국과 미국의 대선 시기라는 측면에서 볼 때도 북한의 대남 관망 가능성은 높아졌다. 과거와 같은 북한의 작위적인 ‘북풍’은 한국의 민주화로 통하지 않으며, 북한이 남한의 선거를 앞두고 다시 도발을 감행한다면 남한 사회의 반북 감정만 고조될 뿐 그들에게 득보다 실이 많음을 익히 알고 있다. 게다가 미국 대선이 20년 만에 겹쳐 있는데, 한·미 차기 정부의 우호적인 대북정책 정립을 기대하며 ‘악수’(惡手)를 자제하고, 기존 대북정책의 흠집 내기에 몰두하는 정책을 구사할 것이다.

따라서 2012년 내내 아니면 적어도 상반기 동안은 북한의 대남정책은 고슴도치처럼 잔뜩 웅크리고 자신들의 체제를 보호하는 데 역점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 내부 수습에 급급할 것이라는 점, 이미 ‘청와대 불바다’ 운운하며 위협카드를 던졌다는 점, 남한이 본격적인 선거정국에 돌입한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대화공세를 전개하거나 새로운 도발로 모험할 가능성은 적어졌다고 본다.

북한은 당장 김정일 장례를 치러야하고, 적어도 김정일 칠순(2.16)까지는 ‘애도’ 분위기를 고조시켜야 한다. 김일성 생일 100돌(4.15)이 되면 ‘경축’과 ‘애도’의 조화를 통해 ‘김일성·김정일 영도 업적 총화’에 이어 ‘강성대국 진입’의 징표를 제시하고 ‘김정은 영도’에 대한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사회 분위기를 김정은에 대한 ‘신심’으로 전환해야 한다. 김정은으로서 이 같은 체제 전반의 관리 문제보다 자신의 권력 강화 문제로 더욱 다급한 입장에 있다. 김정일의 관장 영역까지 책임을 떠맡아 홀로서기를 해야 하는 김정은은 우선 과거 김일성 사후 김정일이 그랬듯이 누가 충신이고 누가 간신인지 분별하여 요소요소에 측근을 배치하는 일이 시급해졌다. 자신의 권력승계, 간부들의 동향감시, 사회통제 문제 등 권력기반을 다지기 위해 경황이 없을 것이다. 권력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김정은이 과거처럼 3년을 ‘애도기간’으로 설정하고 권력승계를 장기간 미룰 가능성은 그다지 높아 보이지 않는다. 김정일 생일은 치르고 권력승계를 할지, 1년 탈상 이후 승계를 할지 현재로서는 불투명하나, 결국은 김정은의 권력 장악 속도에 달려있을 것이다. 김정은은 자신을 중심으로 한 지도체계를 정립해야 하고, 빈번한 애도 혹은 경축행사를 치루기 위해 잦은 대규모 군중동원이 불가피한 입장에서 시간벌기가 필요하며, 외부로부터의 경제적 실익 확보가 절실해진다.

그러나 고강도 대남 위협·도발과는 별개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하고 ‘대북정책전환’을 촉구하는 선전활동은 관행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북한은 2011년 8월 말 남한의 통일부 장관 교체 이후 한 동안 남한의 대북정책 전개양상을 지켜보다가, 12월 들어 통일부 장관의 대북 ‘유연성’ 거론을 ‘기만술책’이라고 비판하면서 ‘5·24조치’와 남한인사 방북 해제를 요구했다. 2012년 봄 남한 총선과 겨울 대선을 앞두고는 현 정부의 대북정책 등 집권 5년을 비판함으로써 보·혁 갈등을 조장하는 선전활동은 한층 강화될 것이며, 사이버 공간 등을 활용한 드러내놓지 않고 하는 선거정국 교란 활동도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2011년 5월경, 김일성 생일 100돌 행사를 통해 김정일 사망 상황을 수습하고 여러 내부 문제가 가닥을 잡게 되면, 북한이 대남정책에 관심을 증대할 여력이 생길 수가 있을 것이다. 이때 김정일 사망이후 남한 정부의 태도를 ‘계산’하려 할 수 있고, 남한 선거정국에 개입하는 방법을 모색할 수도 있으며, 내부 분위기 전환을 위해 대남 긴장 조성을 기도할 수도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북한의 2012년 대남동향은 김정일 사후 내부 문제에 집중할 필요성, 한·미 대선이 겹쳐있는 시기에 대북정책의 변화 가능성을 관망할 필요성으로, 대남 도발과 위협을 고조시키기보다는 대북정책 비판활동 강화하면서 정책전환을 유도하는데 초점을 둘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그러나 김정은 등장이후 북한의 대남정책의 무모성·돌출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5월 이후 내부 불만을 외부로 돌리기 위한 긴장조성이 우려되기 때문에 방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된다. 특히 선전매체나 사이버 공간을 활용한 국론분열 기도는 한층 강화되고 수법도 교묘해질 것이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세밀하게 북한동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한기범·초청연구위원

Ⅲ

남북한관계 ●●●



1. 남북대화

북한은 2011년 신년 공동사설에서 ‘남북 간 대화·협력 분위기 조성 노력’을 밝히 2010년 남북 경색 국면과는 달리 남북관계가 어느 정도 풀릴 것이라는 기대를 모았다. 며칠 후 북한은 조평통 대변인 담화를 통해 당국 간 대화를 제의해왔다(1.8). 이에 통일부는 대변인 논평을 통해 북한의 대화 제의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발표했다(1.10). 우리 정부는 남북 간 진정한 대화가 이루어지려면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 및 추가 도발 방지에 대한 확약,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 확인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남북 당국 간 만남을 제안하였다. 즉, 북한이 제안한 현안들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려면 이 두 사안에 대한 남북 간 당국대화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 후 북한은 인민무력부장 명의의 전통문을 통해 모든 군사적 현안 문제 논의를 위한 고위급군사회담 개최 제의하면서, 이를 위한 1월 말 예비회담 개최를 제의해왔다(1.20). 의제는 △천안호 사건과 연평도 포격전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조선반도의 군사적 긴장상태 해소할 데 대하여로, △회담 시기는 2월 상순의 합의하는 날짜로, △회담 관련 실무적 문제 토의를 위한 쌍방 예비회담 날짜는 1월 말 경으로 제의해왔다. 이에 우리 정부는 즉각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한 책임있는 조치 및 추가 도발 방지에 대한 확약을 의제로 하는 남북 고위급 군사회담에 나갈 것이며, 예비회담 등 구체적 사항들을 추후 북측에 제의,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 확인을 위해 별도의 고위급 당국 회담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추후 이를 위한 당국 회담을 제의

할 예정임을 밝혔다. 그와 함께 통일부는 대변인 논평을 통해 핵문제에 대해 책임 있는 입장을 밝힐 수 있는 남북 당국 간 회동 제안을 북한이 받아들일 것을 촉구했다(1.26).

그 후 남북 간 남북고위급군사회담 준비를 위한 예비회담 일자 조정을 위한 양측의 전통문이 몇 차례 교환된 후, 마침내 2월 8일 『남북고위급군사회담』 개최를 위한 실무회담이 개최되었고 다음날까지 속개되었다. 그러나 실무회담은 합의없이 종료되고 말았다. 북측은 의제로 ‘천안호 사건과 연평도 포격전, 쌍방 군부 사이의 상호 도발로 간주될 수 있는 모든 군사적 행동을 중지할 데 대하여’를 지속적으로 주장하였다. 반면 우리 측은 의제와 수석대표 급에 대한 우리 측 입장을 다시 한 번 설명하고, 북측이 제기하는 의제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도발 사건에 대해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오면 얼마든지 협의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에 북측은 “천안함 사건은 철저히 우리와 무관한 사건”이라고 강변하면서 “미국의 조종 하에 남측의 대북대결정책을 합리화하기 위한 특대형 모략극”이라고 주장, 우리 측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비난하면서 철수하였다. 이로써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가 무산되었고 남북대화는 또다시 단절상태가 예고되었다.

2011년 후반기에는 제2차 남북 비핵화 회담이 베이징에서 개최되었다(9.21). 우리 측에서는 위성락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참석하였고, 북측에서는 리용호 외무성 부상과 최선희 부국장 등이 참석하여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북한 측 입장을 타진하였다. 그 외 민간 부분에서 백두산 화산관련 남북 전문가 회의가 두 차례 열렸고, 금강산관광 문제로 몇 차례의 입장 표명이 있었으나 뚜렷한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2011년 남북대화는 2010년의 긴장 국면이 해소되고 남북관계의 새로운 모멘

팀을 마련할 수 있는 해로 기대되었으나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했다.

2012년 남북관계의 획기적 전망은 그다지 밝지 않다. 2012년 북한은 어려운 경제사정 속에 김정은 후계체제의 안정과 함께 강성대국 진입을 선포하는 해이다. 남측은 이명박 정부의 마지막 해이자, 총선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북정책의 동력이 약화되는 시기로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 남북관계의 커다란 진전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2012년 전반기에 제3차 남북-미·북 비핵화 회담 개최가 예상되나 새로운 정권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없는 한 남북관계의 진전도 제한적인 수밖에 없을 것이다. 북한은 후계체제 공고화 과정에서 남북관계의 긴장 국면 조성을 통한 체제 결속을 노리는 유혹에 빠질 수도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볼 때, 북한은 2012년에는 남측의 대북 지원을 기대하는 한편, 2013년 남측의 새로운 정부 출범을 기다리는 전략을 취할 것으로 전망된다.

- 조 민·통일정책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2. 남북교류협력

가. 경제분야

2011년 남북관계는 천안함과 연평도 포격사건에 따라 취한 5·24조치가 계속 이어짐으로써 개성공단을 제외한 일체의 남북교역과 경협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남북교역은 개성공단으로의 반·출입을 중심으로 일부 대북 지원물자가 포함되었다. 남북 간의 협력사업도 개성공단 진출과 관련된 것이었다. 2011년 9월 말 기준으로 남북교역액은 총 12.73억 달러로 2010년의 66.6% 정도에 달했다. 이 중 반입은 6.8억 달러, 반출은 5.93억 달러였다. 남북교역 품목수에서도 2011년은 2010년에 비해 다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반·출입 품목수는 총 759개였으나, 2011년에는 669개(9월 말 기준)에 달했다. 경협사업의 승인과 관련해서는 민간경협 분야에서는 단 1건의 승인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개성공단에서의 협력사업은 총 16건의 신고에 단 1건의 승인만 이루어졌다.

연도별 남북교역액 현황

<단위 : 백만 불>

구분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반입	152	176	272	289	258	340	520	765	932	934	1,044	680
반출	273	227	370	435	439	715	830	1,033	888	745	868	593
계	425	403	642	724	697	1,055	1,350	1,798	1,820	1,679	1,912	1,273

자료: 통일부, 『남북관계 주요 통계』, 2011.11.15.

남북 간 유일한 경협사업인 개성공단의 2011년 사업은 현상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성공단 가동 기업수는 9월 말 기준으로 123개로 생산액은 총 2억 9,874만 달러였다.

개성공단 가동기업수 및 생산액 현황

<단위 : 개, 만 불>

구분	'05	'06	'07	'08	'09	'10	'11.9	
가동기업수	18	30	65	93	117	121	123	
구분	'05	'06	'07	'08	'09	'10	'11.9	계
생산액	1,491	7,373	18,478	25,142	25,648	32,332	29,874	140,338

자료: 통일부, 『남북관계 주요 통계』, 2011.11.15.

개성공단 근로자는 2011년 9월 말 현재 북측 48,242명, 남측 770명으로 총 47,088명이 종사하고 있다. 이는 2010년 전체적으로 북측 노동자 46,284명보다도 늘어난 상태이다. 다만, 남측 노동자는 5·24조치로 2010년 804명인 것에 비하면 줄어들었으며, 일일 평균 체류 인원도 2010년 543명에 비해 2011년은 평균 490명에 지나지 않고 있다.

개성공단 근로자 현황

<단위 : 명>

구분	'05	'06	'07	'08	'09	'10	'11.9
북측 근로자	6,013	11,160	22,538	38,931	42,561	46,284	48,242
남측 근로자	507	791	785	1,055	935	804	770
합계	6,520	11,951	23,323	39,986	43,496	47,088	49,012

자료: 통일부, 『남북관계 주요 통계』, 2011.11.15.

2012년의 남북경협 전망은 2011년과는 다소 다른 양상을 나타낼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김정일 위원장 사망 이후 우리 사회에 나타나고 있는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바람과 요구, 다시 말해 김정일 위원장의 사망이 남북관계의 긍정적인 전기 마련으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남북경협을 재개할 수 있는 동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핵문제 해결을 위한 미국과 북한과의 대화가 남북대화의 필요성으로 나타남으로써 더 큰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우리 정부는 유연성 있는 대북 정책을 표방한 상태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남북교역 및 경협 중단이 더 이상 사업자 및 우리 경제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한 노력을 구체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5·24조치의 공식적인 해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서도 경협업자의 방북 허가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 특히 김정일 위원장에 대한 조문을 위해 방문은 현대아산의 금강산 관광사업 재개를 위한 발판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남북관계의 제도적인 차원에서는 궁극적으로 정치·군사적인 문제를 경제문제와 분리하려는 노력이 가해짐으로써 2012년 중반 이후 남북교역을 비롯한, 북한 내륙지역에서 임가공 사업이 재개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내다보인다. 전반적으로 2012년 한 해는 4월 총선과 12월 대선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정치권으로부터의 새로운 대북 정책 추진에 대한 대안이 강하게 제시되고, 그와 같은 분위기가 변화된 대북 정책으로 이어지는 한 해가 될 것이다.

- 김영윤·북한인권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나. 사회·문화교류분야

2011년 상반기까지 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은 천안함 폭침과 이에 따른 5·24조치의 시행, 그리고 연평도 포격사건의 영향으로 교착상태에 놓여 있었으며, 하반기에 접어들어 부분적 재개의 움직임을 보였다. 따라서 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은 양적인 측면에서는 과거에 비해 미미한 차원에 머물렀다. 2011년 상반기까지 사실상 중단사태에 놓여 있던 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은 2011년 하반기부터 종교계 및 시급히 재개가 필요한 현안 사업을 중심으로 일부 재개되고 있다.

종교계는 타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활발한 방북활동을 펼쳤다. 대한불교조계종의 지승 총무원장 등 관계자 37명이 방북하여 묘향산 보현사에서 『팔만대장경 판각 1천년 기념 고불법회』를 개최했으며, 평양 인근의 광법사 및 법운암 등을 방문했다. 보현사는 평양에서 북쪽에 위치한 사찰로 1938년 일제의 대장경 약탈에 대비해 제작한 합천 해인사 대장경의 인쇄본 전질을 소장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5·24조치 이후 대북 수해지원이나 영유아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외에는 방북을 엄격히 제한해 왔으며, 조계종의 방북은 5·24조치 이후 종교활동 목적은 물론, 남측 관계자의 첫 평양 방문에 해당한다. 또한 10월 13일에는 남북한 불교도가 금강산 신계사에서 신계사 복원 4주년을 기념하는 합동법회를 진행했다. 합동법회에는 남측 대한불교 조계종 승려·신자와 북측 조선불교도연맹중앙위원회 교직자, 신계사 승려·신도들이 참가했다. 이외에 조계종 중앙신도회가 약탈 문화재 환수 실무협의의 관련 개성지역을 방문했다(11.22).

한국종교인평화회의의(KCRP) 대표회장인 김희중 천주교 대주교를

비롯한 7대 종단 대표들이 방북(9.21~24)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면담했다. 방북단에는 김 대주 교와 지승 조계종 총무원장, 김영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김주원 원불교 교정원장, 최근덕 성균관장, 임운길 천도교 교령, 한양원 한국민족종교협의회 회장 등 7대 종단 대표들이 포함되었다. 7대 종단 대표들은 북한의 장재언 조선종교인협의회 회장, 강영섭 조선그리스도교연맹 중앙위원장, 심상진 조선불교도연맹 중앙위원장, 강철원 조선천도교회 중앙지도위원회 부위원장 등과 면담한 뒤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남북 종교인 정기모임 추진의사를 밝혔다.

이외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가 남북공동기도회와 관련하여 평양을 방문(11.2~5)했으며, 천도교계도 남북합동 시일식과 관련하여 평양을 방문했다(11.12~15).

학술계의 경우 시급히 재가가 필요한 경우 및 지속사업을 중심으로 일부 방북을 수반한 교류협력이 이루어졌다. 남북역사학자협의회가 개성 만월대 발굴조사 실무 접촉 방북(10.28)을 계기로 사업재개를 위한 방북이 이어지고 있다. 이후 남북역사학자협의회, 국립문화재연구소 관계자 등이 개성 만월대 유적 안전진단을 위해 방북(11.14~23)했으며, 10여 명이 유적지 보호조치를 위해 같은 달 24일 재차 방북했다. 이들은 개성 만월대 유적 복구·보존을 위해 12월 23일까지 개성지역에 체류 사업을 진행한다. 만월대는 600여 년 동안 지하에 보존돼온 고려 유적으로, 2007~2010년 총 4회에 걸쳐 조사가 진행됐지만 2010년 5월 18일 제4차 조사 종료 후 5·24 대북제재 조치로 전면 중단된 상태였다.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는 겨레말큰사전 편찬 실무협회의와 관련하여 개성지역을 방문하여 북측과 협의를 가졌다(11.18). 겨레말

큰사전 편찬사업은 남북 및 재외교포가 사용하는 언어를 하나로 종합·정리하는 사업으로, 2005년부터 남북협력기금에서 사업비를 지원받아 진행되었으며, 5·24조치로 중단되어 왔다.

문화·예술계의 경우 정명훈 서울시향 예술감독 겸 유니세프 친선대사가 평양을 방문(9.12~15)하여 조선예술교류협회 측과 북한어린이 대상 음악 교육·교향악단 교환 연주 등을 논의했다.

5·24조치 이후 중단되어 온 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은 2011년 하반기 부분적 재개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전면적 재개라기 보다는 상징성이 있는 종교계 행사 및 시급성 및 지속성을 요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제한적 추이는 천안함 폭침 및 연평도 포격 문제의 해결 등 남북관계 전반에 있어 일정한 계기가 마련될 때까지는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김정일 위원장 사망을 계기로 조문의 부분적 허용 등 일정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으나 당분간 전반적인 남북관계 개선 국면으로 이어지기는 어려우며, 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의 전면적 재개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군부의 중요성이 더 커진 김정일 위원장 사후 상황에서 북한이 천안함 폭침 및 연평도 포격에 대한 납득할 만한 조치를 내리기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북관계의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는 한 2012년에도 남북사회문화교류가 전면적으로 재개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민족공동행사 및 상징성이 큰 대형 문화·예술, 체육행사보다는 제한적인 형태의 교류협력이 주류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 조한범·남북협력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3. 인도주의 사안

가. 북한인권분야

북한은 2009년 4월 헌법을 개정하면서 인권조항을 신설²하였는데 그 이후 제정된 인권 법령들이 속속 공개되었다. 노동보호법(2010.7.8 제정), 여성권리보장법(2010.11.22 제정), 아동권리보장법(2010.11.12 제정), 보통교육법(2011.1.19 제정)이 대표적이다. 해사소송관계법(2011.1.19 제정)은 해사‘청구권’ 보장과 민사상 권리·이익의 보호를 천명하고 있다. 자연보호구법(2009.11.25 제정)과 원림법(2010.11.25 제정)은 북한 주민의 문화적 권리와 관련된 법령들이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북한 주민의 인권은 악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첫째, 김정은 후계구도 안정화 차원에서 자본주의 문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전단(빠라), 영상물, 컴퓨터, 비디오, 휴대폰, MP3, USB 등을 통한 외부 정보 유통행위에 대한 단속 및 처벌이 강화되었다. 2011년 1월부터 중동과 북아프리카 국가들, 특히 리비아에서 번진 민주화바람을 차단하기 위해 전전공공하는 모습을 보였다. 후계자 김정은의 지시로 국경지대에서의 탈북행위 단속 및 처벌도 강화되었다. 국경을 통한 탈북이 난관에 봉착하자 해상을 통해 탈북을 시도하는 사례가 증가하였는데 2011년 12월 10일자로 6차례 발생하였다. 또한 10월 25일에는 북한 양강도 혜산 부근에서 압록강을 건너 중국 측 도로에 올라선 탈북 남성이 북한 경비대가 쏜 것으로 보이는 총에 맞아 쓰러져 숨진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 사건

2 북한 헌법 제8조 제2항: … 근로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며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은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이례적인 것으로 탈북자 문제에 관한 북한과 중국 간의 공조가 강화되었음을 보여준다. 둘째, 북한이 경제강국 건설의 일환으로 제정 또는 개정된 인민경제계획법(2010.4.6 개정), 물자소비기준법(2009.11.11 제정), 노동정량법(2009.12.10 제정)이 공개되었다. 이 법령들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독려하는 내용들로 규정되어 있다. 철도차량법(2010.12.22 제정)도 공개되었는데 이 법령은 철도 분야에서 북한 주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셋째, 화폐개혁 이후 2년이 경과하였지만 실패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북한 주민의 경제난이 심화되었고 식량문제도 지속되었다.

국내에서는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정부와 시민단체의 적극적인 활동이 전개되었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민주당은 6월 14일 북한민생인권법안을 제출(김동철 의원 대표 발의)하였다. 정치권에서는 북한인권법과 북한민생인권법의 병행 심사 여부를 둘러싸고 첨예한 입장 차이를 드러냈다. 카다피의 사망으로 막을 내린 리비아 사태를 둘러싸고 보호책임(Responsibility to Protect: R2P) 이론을 한반도 문제에 적용하는 논의가 학계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국제사회에서는 북한 인권에 대한 문제제기가 지속되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3월 17일 한국과 미국, 일본 등 41개국이 공동제안한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였다. 유엔 총회는 11월 21일 인권문제를 다루는 제3위원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였다. 유엔은 2005년 이후 매년 북한인권결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2011년 결의를 채택함으로써 7년 연속 북한인권결의를 채택하게 되었다. 한편, 로버트 킹(Robert King)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2011년 5월 24일부터 28일까지 북한식량평가팀을 이끌고 북한을 방문하여 현장 조사를 실시하였다. 북한이 미

북한인권법을 관장하는 북한인권특사의 방북을 허용한 것은 이례적이다.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압박이 지속된 가운데 북한과의 인권대화 및 인권분야 기술협력을 모색해야 한다는 움직임도 보였다. 영국은 3월 발간한 인권보고서 『2010 인권과 민주주의』를 통해 북한과 유럽연합(EU)의 인권대화 재개를 촉구하고 북한관리의 인권프로젝트 참여 추진을 표명하였다.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 대한 공론화가 국내와 국제 차원에서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국내에서는 서울과 부산, 순천 등의 지방에서 정치범 수용소의 실상을 알리는 사진전이 개최되었다. 국제적으로는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 AI)의 정치범 수용소 실태 공개(5.3), 슈타지 박물관에서의 정치범 수용소 토론회(6.23), 북한에서 28년 동안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되었던 탈북자 김혜숙의 영국 의회 증언(6.28) 등을 통해 정치범 수용소의 실상을 알리는 활동이 전개되었다.

속칭 ‘통영의 딸’로 불리고 있는 신숙자 모녀가 북한에 억류되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구출 움직임이 공론화되었다. 국내적으로는 신숙자 모녀 생사확인 및 구출 탄원서 제출, 100만인 엽서 청원운동, 구출 기원 노래 만들기, 구출 촉구 시민대회 등의 활동이 전개되었다. 국제 차원에서는 미국에서 신숙자 모녀 구출을 돕기 위한 인터넷 서명운동, 남편 오길남의 미 의회 증언(11.14)과 마르주키 다루스만(Marzuki Darusman) 유엔 북한 인권특별보고관과의 면담(11.21), 신숙자-메구미 송환 한·일의원연맹 결성을 위한 준비모임(11.8), 캐나다 의회의 ‘신숙자 모녀 생사확인 및 송환 촉구 결의안’ 채택(12.8) 등의 활동이 있었다.

2012년은 북한이 표방해온 강성대국 건설 원년이라는 점에서 북한

인권에 대한 전망이 매우 어둡다. 북한은 외부정보 유입차단, 탈북 감시를 위한 주민 통제를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12월 17일 갑작스럽게 사망함에 따라 주민들의 동요를 차단하고 김정은 후계체제를 공고화하기 위해 주민들에 대한 내부 단속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북한 당국은 주민통제의 법적 제재수단인 인민보안단속법과 행정처벌법, 형법의 개정을 통해 주민통제를 강화할 수도 있다. 또한 북한 주민들은 경제강국 건설을 위해 열악한 노동조건 및 경제건설현장에 내몰릴 것으로 보인다. 경제난과 식량난 문제도 지속될 것이다.

국내 차원에서 민간에서의 북한인권법 제정 요구는 지속될 것이다. 그러나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국회 차원에서의 북한인권법 제정 움직임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것으로 보인다. 압박을 통해 북한 인권을 개선하자는 목소리와 교류·협력 및 대북지원을 통해 북한 인권을 개선하자는 주장이 접점을 찾으려는 노력을 할 것으로 보이지만 쉽게 타협되지 못할 것이다. 김정일의 사망에 따라 한반도 유사시 보호책임 이론을 한반도 문제에 적용하려는 논의가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인권결의를 비롯한 국제사회에서의 북한인권 문제제기는 지속될 것이다. 신숙자 모녀를 구출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방안이 국내 차원과 국제 차원, 당국 차원과 민간 차원에서 다양하게 논의될 것이다.

- 이규창·북한인권연구센터 부연구위원

나. 대북지원 및 북한이탈주민문제

2011년 대북지원은 5·24조치의 틀 내에서 취약계층과 지역, 인도적 성격의 물품 중심으로 제공되었다. 대한적십자사는 6월 이후 북한에서 발생한 수해에 대해 영유아용 영양식 140만 개, 영유아용 과자 30만 개, 초코파이 192만 개, 라면 160만 개 등 총 50억 5천만 원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우리 측의 지원 의사에 대해 북한이 반응을 보이지 않자 10월 초 지원 절차는 종료되었다.

민간 차원의 지원은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의 영향으로 여전히 제한되었지만 분유, 두유, 밀가루, 의약품, 말라리아 방역용품 등 인도적 물품을 중심으로 지원이 지속되었다. 정부 차원의 식량지원은 제공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민간 차원에서 라면이나 밀가루 중심으로 분배의 투명성 보장 아래 지원이 제공되었다. 민간단체의 지원은 2011년 10월 기준으로, 32개 단체 100억 원으로 집계되고 있다. 하반기 민간 차원의 지원을 위한 방북이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 그 과정에서 통일부 인도지원과장이 민간단체인 평화대사협의회의 방북 시(11.25~29) 북한 방문이 성사되었다. 또한 지난해 중단되었던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이 일부 재개되었다. 통일부는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위해 지난 2009년 승인했다가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승인을 보류했던 6백 94만 달러를 WHO가 집행하는 것으로 승인하였다. 그리고 정부는 인도적 차원에서 UNICEF를 통한 북한 영유아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백신 및 의약품 지원, 영양개선 사업 등에 약 65억 원(565만 달러) 규모의 남북협력기금을 무상 지원하기로 의결하였다.

2012년에도 천안함, 연평도 포격에 대한 북한의 전향적 태도가 없는 한 5·24 대북조치를 훼손하지는 않는 범위 내에서 대북지원이 제공될

것이다. 정부 차원의 식량지원은 2012년에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산가족 등 인도주의적 문제의 해결을 위해 식량지원은 검토될 가능성은 있다. 정치적 상관과 무관한 인도적 지원과 민간단체의 지원은 2011년에 비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지원은 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2012년 상반기 만기가 도래하는 대북식량차관의 상황에 대한 논란이 증폭될 것이다.

2011년 12월 5일 기준으로 북한이탈주민은 남성 770명, 여성 1,784명(70%) 등 총 2,554명이 입국하였다. 전체적으로 여성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것은 가족의 도움을 받아 입국하는 규모가 늘면서 동시에 가족단위 입국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 당국의 통제 강화와 중국의 체포 및 강제송환에도 불구하고 2010년에 비해 2011년도 입국 규모가 증가한 것은 가족들의 도움을 받아 탈북 후 1~2개월 이내에 국내에 입국에 성공하는 비율이 높은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010년과 유사하게 동남아 국가, 특히 태국을 경유하여 국내에 입국하는 비율이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 2011년에도 북한이탈주민들의 상당수는 탈북자 출신 중개인들의 도움을 받아 입국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탈북여성들의 경우 강제결혼 등 인신매매가 지속되고 있으며, 화상채팅과 유흥업소 등에서 성적 유린을 당하는 현상 또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2009년 12월 화폐개혁 이후 탈북을 차단하기 위해 국경경비가 강화되어 탈북비용이 크게 늘어나게 되었다. 또한 김정은 후계체제 구축과정에서 사회통제의 일환으로 탈북자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면서 북한 당국의 탈북자에 대한 처벌 및 가족에 대한 강제추방도 강화되었다. 탈북난민보호운동본부(CNKR)가 “9월 27일 중국 선양(瀋陽)에서 20명, 웨이하이(威海)에서 10명, 옌지(延

吉)에서 29일 3명, 30일 2명 등 탈북민 35명이 체포됐다”고 밝히는 등 중국의 탈북자 송환이 강화되고 있다. 또한 중국의 동북3성 일대에서 탈북자 지원 활동을 전개하는 선교사와 민간인에 대한 북한의 독극물 테러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이들의 안전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또한 2010년에 이어 탈북고아 및 탈북여성과 중국 남성 사이에 태어난 무국적 아동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미국 상하 양원은 각각 2011년 2월 28일, 4월 8일 「2011 북한난민 입양 법안」을 발의하였다.

북한이탈주민들의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2009년 6개 지역에서 시범운영이 되었던 하나센터가 2011년에는 31개 지역으로 확대되었으며, 정보 공유 등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하나센터협회’가 결성되었다. 또한 2009년 11월 설립된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 지원 활동을 전개하여 민간 차원의 정착지원역량을 결집하여 지원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구축되고 있다.

2012년에는 중국 지도부 교체와 북한의 강성대국 원년의 해를 맞아 중국과 북한 내 탈북자에 대한 단속과 통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2012년 강성대국 원년의 해를 맞아 탈북현상을 억제하기 위한 국경단속이 강화되어 입국 비용의 증가가 예상된다. 그렇지만 2012년에도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들의 도움을 받아 가족 및 지인들의 도움을 받아 국내에 입국하는 북한이탈주민의 국내입국 규모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전체 입국 규모는 크게 감소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중국 출산 자녀를 동반한 북한이탈여성들의 입국도 지속될 것으로 평가된다. 무엇보다도 탈북여성이 중국에서 출산한 아동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지속될 것이며, 국내적으로 이들에 대한 지원과 보호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 김수암·북한인권연구센터 소장

다. 이산가족문제

2011년은 남북 이산가족문제와 관련하여 별다른 성과가 없는 한 해였다. 일시적으로 상봉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한 계기는 있었으나 상봉을 비롯한 이산가족 교류에 있어 아무런 성과도 남기지 못하였다. 사실상 2010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사건(11.23)으로 적십자회담(2010.10.26~27)에서 합의된 후속회담(2010.11.25 예정)이 무산되면서부터 2011년 이산가족문제 해결 전망은 밝지 않았다.

2011년 들어서도 남북관계의 경색국면이 지속됨에 따라 예상했던 대로 상반기에는 이산가족문제와 관련하여 긍정적인 징후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2011년 7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제1차 남북 비핵화 회담이 두 달 후 제2차 회담으로 이어지는 등 남북 간 대화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남북 당국 간에 이산가족 상봉이 극적으로 합의될 수도 있으리라는 기대감이 적지 않았다. 또한 2011년 9월, 신임 류우익 통일부 장관이 대북정책에서의 유연성과 이산가족문제 우선 추진 등을 밝힌 후 북한 당국이 대남 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를 통해 이산가족 상봉 등 교류와 대화를 통해 남북관계를 개선하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³ 상봉에 대한 기대감이 보다 높아지기도 하였다.

류우익 신임 통일부 장관은 기자회견 등을 통해 이산가족 상봉을 추진할 뜻을 거듭 밝혔으며, 유종근 대한적십자사 신임 총재도 올해 안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사안은 이산가족 상봉이며 이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특히 2011년 10월 통일부 장관은 대한적십자사 총재와의 면담에서 통일부와 대한적십자사가 서로 협력하고 북측에서도

3 『YTN』, 2011년 9월 19일.

호응하도록 해 이산가족 상봉 숫자도 늘리고 가능하다면 정례화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힌 바 있다.⁴ 이산가족문제와 관련하여 남북 당국자가 만나 의견을 나누는 것은 2011년 11월 2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국제적십자사연맹 총회에서이다. 이 때 대한적십자사 총재(유중근)가 북한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연내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논의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이에 대해 북측 당국자는 상봉준비에 실무적으로 1~2개월이 필요한 만큼 연내 상봉은 어려울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⁵

상봉을 비롯한 이산가족 교류와 관련하여 아무런 성과없이 한 해를 보내기는 하였으나 국내외적으로 특기할 만한 일들은 있었다.

첫째, 통일부에서 실시한 ‘2011년 이산가족 실태조사’이다. 이 조사는 이산가족의 전면적 생사확인과 상봉 정례화에 대비한 기초자료를 구축하고, 이산가족 정책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이산가족 당사자들의 실태를 조사하고 인식을 파악한 것이다. 둘째, 한국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군포로·납북자·이산가족문제’를 3대 인권 현안으로 규정하고 조속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인 책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⁶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산가족 대부분이 고령이라는 점에서, 시급한 해결을 위해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인도주의 관점에서 새로운 접근 방법을 제안하였는 바, 즉 국제적십자사의 중앙심인사업본부(Central Tracing Agency)원칙⁷에 따른 추진 등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셋째, 2011년으

4 『연합뉴스』, 2011년 10월 31일.

5 『연합뉴스』, 2011년 11월 30일.

6 국가인권위원회는 2011년 10월 24일, 전원위원회에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가 정책 권고안』을 수립, 정부에 권고하기로 결정하였다.

로 7년 연속 채택되고 있는 유엔 북한인권 결의안에는 이산가족 상봉 재개 문제가 처음으로 공식 제기되었는데, 중단된 이산가족 상봉은 시급한 인도적 우려사항이라고 지적하였다.

한편, 해외동포 이산가족문제 해결에 있어서도 특기할 만한 성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국 적십자사가 북한 적십자회에 미국 내 한인 이산가족들이 북한의 가족에게 보내는 서신을 전달하고, 또한 한인 이산가족 명단도 전달하는 등 이산가족문제 해결을 보다 적극화하고 있다는 것이다.⁸ 2011년 8월, 미국과 북한이 이산가족 서신교환에 합의한 후 미국은 7통의 서신을 북한에 전달했고 그 가운데 한 통에 대한 회신이 왔다고 한다. 또한 미국 적십자사는 2011년 11월 22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국제적십자 총회에서 북한 적십자회 측과 만나 북한에 있는 가족을 찾는 한인 이산가족 명단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2년에도 남북관계의 경색이 풀리지 않는 한 이산가족문제 해결의 전망은 밝지 않다. 그러나 만성적인 식량부족과 경제난에 따른 북측의 수요가 우리 측의 대북지원으로 충족된다면 연초 설 명절을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이 성사될 가능성이 낮지만은 않다. 2011년 11월 제네바에서 이루어진 남북 적십자 당국자 간의 만남에서 우리 측이 연내 이산가족 상봉을 제안한 것에 대해 북측의 당국자가 단호하게 거부하

7 상봉을 원하는 사람 전원을 대상으로 생사와 주소확인, 주소가 확인된 가족 서신 교환, 상봉, 상호방문, 당사자들이 원하는 지역에서의 재결합 등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 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가정책 권고안』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2011.10.24) 참조.

8 『연합뉴스』, 2011년 11월 23일.

기보다는 상봉을 위한 실무적 준비 기간을 들어 연내 상봉의 어려움을 밝혔다고 하는 것은 2012년 초 상봉사업의 성사 가능성과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 임순희·북한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부록: 2011년 주요 사건일지

남북정세 일지

- 1.8 북한 조평통 대변인 담화에서 당국 간 대화 제의
- 1.10 북한 아·태평화위·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장·경협사무소 북측소장, 남한 통일부·대한적십자사 총재·경협사무소 남측소장에게 전통문 발송
- 1.11 북한, 노동신문 ‘현 사태 타개의 근본열쇠’라는 논평에서 “지난해 유관국들이 북한의 평화협정체결 요구에 응했다면 연평도 포격사태는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
- 1.12 판문점 적십자 직통전화 운영 재개
- 1.28 북한 『조국전선』, 남북 △당국대화 재촉구 △국회의원 접촉·협상 제의 △협력사업 적극 추진과 자유왕래 장려 주장과 유관국들 등 ‘북연합성명’ 지지와 성원 호소 ‘전체 조선민족에게 보내는 호소문’ 발표
- 2.1 북적 위원장, 한적 총재 앞으로 ‘남북적십자회담 조속개최 요구’ 편지 발송
- 2.8~9 남북고위급군사회담 개최를 위한 실무회담 합의없이 종료
- 2.27 키리졸브/독수리훈련에 대한 총공세에 진입, 전면전으로 대응하여 ‘서울불바다전과 같은 무자비한 대응’ 위협, 핵억제력과 미사일 타격전으로 맞서 나가겠다고 주장
- 3.1 북한, 노동신문 논설을 통해 “전쟁이 터지면 초래될 것은 핵참화뿐”이라며 한국을 압박
- 3.3 2.5 서해 연평도 인근 해역으로 온 북한 주민 31명 중 복귀 희망한 27명 송환 통보
- 3.3 북한 적십자중앙위 대변인 담화를 통해 남측이 귀순공작을 했다고 비난하면서, 31명 전원을 배와 함께 송환할 것을 요구
- 3.17 북한 지진국장 명을 통해 백두산화산활동 관련 연구사업 공동 추진 등을 위한 협의 진행 제의
- 3.27 월선 북한 주민 27명과 선박 송환
- 3.29 백두산 화산 관련 남북전문가 회의(문산, 출입사무소)
- 3.31 남한 투명성 강화 조건 하에 민간차원 취약계층 지원 재개
- 4.8 북한, 아·태평화위 대변인 담화에서 현대 측과 맺은 금강산관광 합의 서에서 현대 측에 준 독점권 조항의 효력을 취소, 북측지역을 통한 관광은 북이 맡아 해외사업자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남측지역을 통한 관광은 계속 현대가 맡아야 한다는 입장을 통보
- 4.12 제2차 백두산 화산 관련 남북전문가 회의(개성, 자남산 여관)

- 4.27 북한 조선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남한 동북아역사재단에 동해 표기 관련 남북역사학자간 공동대처 제의
- 4.28 북한, 백두산 화산문제 관련 학술토론회 5.11~13 서울 또는 평양 개최 제의
- 4.29 북한, 5월 중순 개성에서 동해 표기 관련 남북역사학자 간 협의 제의
- 5.6 북한은 5.6 중동 논평 등을 통해 서해 해상사격훈련(5.3 백령도 연평도)을 ‘북침전쟁연습’, ‘선전포고’ 등으로 지속 비난
- 5.9 이명박 대통령, 북한이 비핵화에 합의한다면 내년 서울에서 개최되는 핵안보정상회의에 김정일 위원장 초청 제안(한·독 정상회담 공동 기자회견)
- 5.10 농협해킹 북한 소행이라는 결과발표는 천안호 사건과 같은 날조극이라고 비난
- 5.30 북한, 남측이 반공화국대결책동을 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남측과 상대를 하지 않을 것이고, 지속적인 전면공세에 진입하며, 실제적 행동 조치로 동해지구 군통신 차단 및 금강산지구 통신연락소 폐쇄 주장
- 6.1 북한 국방위 대변인, 5월 9일부터 비밀접촉 진행, 남측이 천안함·연평도 관련, ‘사과처럼 보이는 절충안을 만들자’고 애걸, 5월 하순경 정상 회담을 위한 장관급회담을 열어 합의사항을 선포, 6월 하순경 제1차 정상회담 판문점에서, 제2차 정상회담은 두 달 뒤(8월)에 평양에서, 제3차 정상회담은 내년(2012) 3월 핵안보정상회의 기간에 개최할 것을 예견하고 있으니 딱한 사정을 들어달라고 구걸했다고 날조 및 비난
- 6.1 남한 통일부 대변인, 북한 보도는 우리의 진의를 왜곡한 일방적 주장으로 일일이 대응할 필요를 느끼지 않으며, 북한의 이러한 태도에 유감을 표명
- 6.3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최고 존엄 표적사격은 특대형 도발행위라고 비난하면서, 주모자 즉시 엄벌 조치와 사죄·재발방지 담보 요구, 실제적이고 전면적인 군사적 보복행동 진입 위협
- 6.16 북한, 6.11 북한 주민 9명이 연평도 해상에서 월선해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하면서, 즉시 송환 요구
- 6.16 북한,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에 따라 국제관광특구 내의 모든 재산을 정리, 금강산국제관광특구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모든 남측당사자들은 동결, 몰수된 재산들의 처리문제 협의를 위해 30일까지 금강산에 들어올 것을 통고
- 6.29 금강산관광지구 재산 관련 문제권 협의
- 7.13 금강산관광사업 재산문제 협의
- 7.22 ARF 계기 남북 비핵화 회담 개최
- 7.25 남한 통일부 교류협력국, 금강산관광 관련 당면문제 협의를 위해 7.29 당국실무회담 개최를 제안
- 7.29 남한 통일부 교류협력국, 당국 간 회담 제의에 성의있는 태도로 호응할 것을 촉구

- 8.3 남한 한적 총재, 북한지역 수해피해 관련 물품 지원 의사 전달
- 8.4 북한 적십자중앙위 위원장, 생필품·의약품보다 식량·시멘트 등의 지원 요구
- 8.4 남한 한적 총재, 지원물자의 조속 전달을 위한 조치 촉구
- 8.7 북한 『판문점』 대표부, 한·미 UFG 합동군사연습 예정 관련 “조성된 엄중한 사태와 관련하여 위임에 따라 미한 당국에 원칙적 요구를 제안 한다”며 훈련중지 요구 한·미에 공개서한
- 8.10 현대아산 장경작 사장 등 금강산 방북, 금강산 재산권 문제 협의
- 8.11 북한 군사실무회담 북측 단장, 우리 측이 발파 작업을 포사격으로 날 조하였으며, 사실관계 확인 없이 대응 포격을 한 것이 계획적인 조작임을 실증한다고 주장하며 주범 처벌 및 사실 공개촉구
- 8.12 월선(8.11) 북한 주민 4명, 판문점 통해 송환
- 8.18 월선(8.16) 북한 주민 2명, 판문점 통해 송환
- 8.19 현대아산 관계자 금강산 방북, 금강산 재산권 문제 협의
- 8.22 북한 금강산국제관광특구지도국 대변인 답회(8.22), “남 당국이 관광 재개와 재산등록을 거부한 조건에서 특구법 제26조, 제40조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적조치를 취할 것” 선포
- 8.23 금강산 체류 우리 국민 14명 철수
- 8.25 교류협력국장 주재 『금강산 관광 사업 대책반 1차 회의』 개최
- 9.6 교류협력국장 주재 『금강산 관광 사업 대책반 2차 회의』 개최
- 9.12~15 정명훈 서울시향 예술감독 겸 유니세프 친선대사, 평양 방문
- 9.19 KCRP(한국종교인평화회의) 7대 종단 대표 등 24명 방북(평양·백두산)
- 9.21 제2차 남북 비핵화 회담(베이징)
- 9.21~24 9.21~24 KCRP(한국종교인평화회의) 7대 종단 대표 등 24명 방북(평양·백두산)
- 10.4 일본 표류(9.13) 탈북자 9명, 인천공항 통해 입국 및 북한 주민 2명, 동해상으로 월선, 귀순의사 표명
- 10.6 북한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동해 월선 북한 주민 2명 및 일본 표류자 9명 송환 요구
- 10.6 남한, 북측에 북한 주민 2명은 본인들의 자유의사를 존중하여 처리할 것임을 통보
- 10.11 개성공단 입주기업 애로 해소 조치 발표
- 10.19 이명박 대통령의 미 의회 연설(10.13, 현지시간)에 대해 “친미 충성맹세로 일관됐다”고 왜곡 비판과 미 국방부 펜타곤 방문 및 한·미 FTA 미국 의회 비준 등 망미성과 폄하
- 10.28 남북역사학자협의회, 개성 만월대 발굴조사 관련 방북
- 11.14~23 남북역사학자협의회 및 국립문화재연구소, 개성 만월대 유적 안전진단 관련 방북(개성)

- 11.18 겨례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 겨례말큰사전 편찬 실무협의 관련 방북(개성)
- 11.22 조계종 중앙신도회, 약탈 문화재 환수 실무협의 관련 방북(개성)
- 11.25~29 평화대사협의회, 밀가루 분배 모니터링 관련 방북(평북 정주시)
- 11.29 남한 국방부의 애기봉 등탑 점등(12.19~) 방침에 대해 “긴장한 전연 일대에서 반복 심리모략전에 나서는 것은 선전포고와 다름없는 망동”이라고 비난하며 즉각 중단 촉구
- 12.3 남한 당국의 ‘대북정책과 비핵·개방·3000’은 “반민족적 대결정책, 체제통일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서 기필코 대결과 전쟁소동으로 이어지게 된다”고 비난
- 12.13 탈북작가 격려편지 관련 ‘이OO역도’라고 대통령을 실명거론하며 “반북대결광기를 고취하기 위해 벌려놓은 위안 광대극”이라고 재차 비난
- 12.14 「남북 여성단체 공동결의문(12.14)」 “2012년이 평화와 통일의 새로운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가는 희망의 해가 되기를 기대하며 ‘3개항 결의문’ 발표
- 12.15 아군의 백령도·연평도 해상사격훈련(12.12)에 대해 “복침전쟁광증”이라며 “연평도의 그 불바다가 청와대의 불바다로 타번지게 될 것”이라고 비난 및 ‘불바다’ 위협 지속
- 12.20~21 남한 노무현재단과 한반도평화포럼, 김정일 사망 조의문 12.20 발표 및 불교 조계종, 12.21 애도문 발표
- 12.20 남한 정부, 북한 주민들에게 위로의 뜻 전했으며, 전방 3곳 성탄등탑 점등 없던 일로 최종 결정
- 12.20 남 야당인사들과 현대그룹 현정은 회장은 회장 및 시민단체들(「범민련」 남측본부 등), 12.19 김정일 사망 ‘조의 표시 및 조문’ 발표
- 12.21 남한 정부, 민간차원 대북 조건 발송 허용
- 12.22 남한 당국이 “북 지도자와 주민에 대한 분리대응을 운운하며 공식 애도와 조의표시를 부정하고 주민들을 위로한다는 식으로 불순한 속심을 드러냈다”며 “당국 자신도 응당한 예의를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
- 12.26 이희호 여사와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일행, 김정일 조문 및 김정은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의 뜻 표시
- 12.27 방북 이희호 여사와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일행, 만수대의사당에서 김영남(북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담화
- 12.28 북한, 「민화협」 부장과 기자의 대담을 통해 서울대 분향소 강제철거와 보안법피해자모임 등의 분향소 설치시도 저지 관련 “패륜패덕적 행위”라고 비난하며 “남 당국은 반민족적 행위의 대가를 두고두고 치르게 될 것”이라고 위협
- 12.30 북한 국방위 성명을 통해 남 정부의 김정일 사망 관련 대응(국가안전

보장회의소집·군부대 경계태세, 선별조문 등)에 대해 “리명박 역적패 당파는 영원히 상종하지 않을 것”이라고 실명거론 강력 비난과 “북수의 불바다” 등으로 위협

동북아정세 일지

- 1.19 미·중 정상회담 개최
- 1.28 위성락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방한한 보로다브킨 러시아 6자회담 수석대표와 회동
- 2.13 북 인민보안부장(주상성)과 중공안부장(맹건주) 사이 회담, 평양에서 진행 및 ‘합의서’ 조인
- 3.11~14 러시아외무성부상의 방북
- 3.25 북한 외무성 리근 국장 베를린 방문
- 3.28 북한 ‘최태복’ 최고인민회의 의장 일행, 영국국회 상하 양원의장 및 외무성 부상 등과 담화
- 3.31 북한 군사대표단(박재경 인민무력부 부부장), 라오스국방성대표단과 회담
- 4.12~15 김항식 국무총리, 중국 방문
- 4.14 ‘제3차브릭스수뇌자회의’, 중해남성에서 진행
- 4.15 북한 인민보안부 대표단(단장 : 리명수 인민보안부장)-베트남 공안성 대표단 사이 회담
- 4.21 제7차 한·러 극동시베리아 분과위 및 제2차 한·러 비즈니스 포럼, 양측 정부대표와 경제인들의 참석 하에 서울에서 개최
- 4.24~26 사하공화국 보리스프 대통령 방한
- 4.26~28 지미 카터 미 전 대통령과 전직 국가원수(3명) 등 The Elders 그룹 방북
- 5.10 박익춘 외무상, 미국 프랭클린 그레이엄 목사(미비정부단체 사마리탄스 퍼스 회장) 일행과 담화
- 5.17 김정일, 러시아연방 대외정보국 대표단(단장: 엠.에.프라드코브 국장) 접견
- 5.22 한·중·일 3국 정상회의 개최
- 5.24~28 미국 국무성대표단(단장: 인권 및 인도주의의 문제 담당 특사 로버트 킹), ‘미·북 간 인도주의문제 협의차’ 방북
- 5.25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후진타오(호금도) 중국 국가주석이 25일 베이징(북경) 인민대회담에서 정상회담
- 5.25 김정일, 호금도 주석과의 정상회담 및 연설, 온가보 총리와도 담화
- 6.4~21 북한 태권도위원회 태권도 시범단 방미
- 6.8~9 북·중, 『황금평·위화도경제지대와 라선경제무역지대 조중공동개발 및 공동관리대상』 착공식 진행

- 6.10~13 중국공산당 대표단 북한 방문, 전략대화를 개최하고 김정일 위원장을 비롯 김영남 상임위원장을 접견
- 6.23 북한, 개성시-시리아 꾸네이트라시, 친선관계 합의서를 꾸네이트라 시에서 조인
- 7.11 중국 호금도 주석·오방국 「전인대」 상임위원장, 인민대회당에서 북 친선대표단(양형섭) 접견 및 담화
- 7.14~16 한·중 국방장관 회동
- 7.22 발리 남북 비핵화 대화
- 7.21~22 일본 나카이 전 납치문제담당상과 북한 송일호 북·일 국교정상화 담당 대사, 창춘에서 담화
- 7.28~29 미·북회담, 뉴욕에서 개최
- 7.29 중국 호금도 주석, 김정일에게 수해 위문전문 및 중국 정부와 홍십자회의 긴급구제물자 제공 결정
- 8.4~8 중국 해군 훈련함선편대(정허호·뤄양호), 친선방북(조중우호, 협조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체결 50돌 계기)
- 8.4 북·중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
- 8.8 한·러 외교장관 회담 모스크바에서 개최
- 8.9~11 천영우 외교안보수석 방미
- 8.10 일본 간 나오토 총리, 한·일 강제병합 100년 담화 발표
- 8.23 김정일, 러시아연방 부랴티야 공화국 방문
- 8.24 북·러 정상회담 개최
- 8.25 김정일, 중국 네이멍구자치구(내몽골) 방문
- 8.25 한·중 6자회담 수석대표 북경에서 회담
- 8.26 북·러 정부, '무역·경제 및 과학기술협조위원회 제5차 회의 의정서' 조인
- 9.13 북한 원유공업성 대표단(단장: 김희영 원유공업상), 러시아 방문
- 9.15 한국가스공사·러시아 가즈프롬 가스관연결 프로젝트에 대한 로드맵 체결과 별도로 북한 석유산업성·러시아 가즈프롬 양해각서 체결 및 프로젝트를 위한 실무그룹을 구성하기로 합의
- 9.19~24 러시아 극동지역 주요 언론인 14명 외교통상부 초청으로 특별취재차 방한
- 9.21 남북한 6자회담 수석대표 북경에서 제2차 남북 비핵화 회담
- 9.21 미·일 정상회담 뉴욕에서 개최
- 9.21~22 제2차 고위급 안보회의 개최
- 9.23 제4차 한·러 대테러협의회
- 9.26 북한 최영림 내각총리, 중국 원자바오 총리와 인민대학습당에서 회담
- 9.28 한·중 경제장관회의 개최
- 10.4 러시아 정부의 WFP(세계식량계획)를 통한 대북 제공 식량 납입 완

- 료에 따른 기증식
- 10.16~22 외교통상부, 주 블라디보스토크 총영사관, 러시아 극동지역 주정부
공동주관 ‘에너지자원 및 건설협력 설명회’ 개최
- 10.17~20 남·북·미 3자 민간 학술회의(조지아대)
- 10.18 북한 무역성(리용남 무역상)과 러시아 아무르주 정부(올레그 꼬쨬마
꼬 장관) 사이 ‘무역경제협조에 관한 합의서’ 평양에서 조인
- 10.19 일본 노다 요시히코 총리, 이명박 대통령과 정상회담
- 10.20 김정일, 방북중인 코제야코 아무르주 주지사 접견
- 10.20~27 김민식 북한 동해함대 사령관 해군소장, 러시아 태평양함대를 공식
방문
- 10.21 제12차 한·러 차관급 정첵협의회, 모스크바에서 개최
- 10.24 김정일, 리커창 중국 국무원 부총리 접견 및 만찬 마련
- 10.24~25 제2차 북·미 대화
- 10.25 한·러 정부 간 위원회 회의 서울에서 개최
- 10.26~27 중국 리커창 상무 부총리, 한국 방문
- 10.27 한·러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
- 10.28 북한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 모스크바를 방문해 테니스포 외교부 제
1차관 및 보로다브킨 차관과 회동
- 10.31~11.2 제2차 한·러 대화 KRD 포럼이 ‘현대화와 혁신’을 주제로 상트 페테르
부르크에서 개최
- 11.2 한·러 정상회담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개최
- 11.9 북한 인민내무군 대표단(단장: 이태철 상장), 베이징 공안부청사에서
멍지엔주(중국 국무위원 겸 공안부장)와 담화
- 11.11 북한 판문점 대표부 대변인, 미군유골문제 해결을 위한 『미·북 군부
회담』, 10.18~20 태국 방콕에서 진행 및 2012년부터 유골발굴사업
재개 합의 발표
- 11.21 유엔 제3소위(인권문제 담당), 대북 인권결의안 채택
- 11.23 제3차 한·러 외교차관 전략대화, 서울에서 개최
- 11.24 북한 외무성대표단(단장: 김성기 부상), 베이징에서 중국 외교부장
양제츠와 담화
- 11.24 북한·쿠바, 쿠바 아바나에서 ‘2012년 경제 및 과학기술협조 발전을
위한 의정서와 2012년 상품교류에 관한 의정서’ 조인
- 12.13 북·러 ‘항공탐색 및 구조분야에서의 협조’에 관한 협정, 만수대의사당
에서 조인
- 12.15 미국의 로버트 킹 북한인권특사와 북한 이근 국장, 북경에서 전격
회동
- 12.15 북한 전자공업실무대표단(단장: 한광복 내각부총리 겸 전자공업상),
중국 국무원 부총리 장더장과 베이징 남시태극민관에서 담화
- 12.19 러시아 대통령, 김정은에게 조전 발송

- 12.19 중국공산당 중앙위·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국무원·중앙군사위 조전 발송
- 12.19 미국 전 대통령 지미 카터, 김정은에게 조전 발송
- 12.19~21 유엔사무총장·유엔사무국 고위인사들·세계식량계획 집행국장대리·국제전기통신동맹 총서기대리 및 국제기구주재 여러 나라 외교대표들 등, 12.19~21 북 상설대표부 등에 조의방문
- 12.20 중국 국가 주석 호금도와 전인대 상무위 위원장 오방국등 당과 국가 지도간부들, 주중 북한 대사관 조문
- 12.21 중국 국무원 총리 원자바오·「정협」 전국위원회 주석 자칭린·부총리 리커창 등, 주중 북한 대사관 조문
- 12.31 김정은에게 중국주석 후진타오가 보내는 연하장, 주북 중대사 류홍차이가 김영일 당비서에게 전달

북한정세 일지

- 1.1 북한, 당·군·청년보 신년 공동사설 발표
- 1.11 북한, 각지 사찰들에서 성도절 기념 조국통일기원법회 진행
- 1.13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정령, 국가가격제정국을 ‘국가가격제정위원회’로 개정
- 1.15 북한, ‘국가경제개발 10개년 전략계획’에 관한 내각결정 채택 및 국가경제개발총국 설립 결정
- 1.21 북한, 올해 경공업부문 총력집중 지속 강조와 단천마그네사공장 등 마그네사크링카생산기지로 면모개선 및 원료매장량 등 유리한 제반 여건을 토대로 마그네사크링카 생산과 수출 전망 호평
- 1.26 북한, △여성권리보장법(교육, 문화, 보건, 재산분야와 결혼 등 여성들의 권리보장) △아동권리보장법(사회생활, 가정 등에서의 아동권리 보장) △철도차량법(철도차량생산과 등록, 운영 등 규제) 새로 채택 및 발표
- 1.28 북한 「조국전선」, 남북 △당국대화 재촉구 △국회의원 접촉·협상 제의 △협력사업 적극 추진과 자유왕래 장려 주장과 유관국들 등 ‘북연합성명’ 지지와 성원 호소 ‘전체 조선민족에게 보내는 호소문’ 발표
- 1.31 북한, ‘민주여성동맹’ 중앙위 제59차 전원회의, 평양에서 진행
- 2.14 김정일, 중국 공안부장 접견(강석주 내각 부총리, 류홍재 주북 중대사 배석) 및 만찬
- 2.23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모범지방공업군, 시, 구역 칭호를 제정함에 대한 정령 발표
- 3.16 북한 국방위 결정 제08호, 인민보안부장 주상성 신병관계로 해임 결정

- 3.18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4차 회의를 4.7(목) 평양에서 소집한다”는 결정(3.15자)을 발표
- 3.22 북한 군사대표단(단장: 박재경 인민무력부 부부장), 베트남·라오스·캄보디아 순방차 평양 출발
- 3.29 북한, 개성시에 ‘모범교육시칭호’ 수여함에 대한 정령 제1531호 발표
- 4.6 북한 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 ‘보통교육법’ 새로 채택 발표
- 4.7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4차회의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
- 4.15 김부자의 ‘주체혁명·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 업적’ 칭송 및 전당·민에게 “김일성조선 100년사를 총화하는 올해에 당이 제시한 목표를 실현하고, 2012년에 기어이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어제끼자”며 “경제강국 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총공세·총결사전” 독려
- 5.17 김정일, 러시아연방 대외정보국 대표단(단장: 엠.에.프라드코프 국장) 접견 및 만찬 마련
- 5.20~5.26 김정일, 호금도 주석 초청에 의해 중국 비공식 방문
- 5.31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총 6장 41조) 채택 정령 제1673호 발표
- 5.31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리무영(화학공업상) 내각부총리 임명 정령 제1674호 발표
- 5.31 『천년기 개발목표달성 정형에 대한 2010년 보고서』 발표회, 박영숙(중앙통계국부국장/연설) 및 주북 유엔개발계획 대표부 등 국제기구 대표부 성원들 참가하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
- 6.2 북한,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 채택 발표
- 6.6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정치국 확대회의, 김정일의 비공식 방중(5.20~26) 결과에 대해 통보 및 토의 등 진행
- 6.6 북한, ‘황금평·위화도 경제지대를 내움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정령 발표
- 6.8~9 황금평, 위화도경제지대와 라선경제무역지대 조중공동개발 및 공동관리 대상 착공식들이 8일과 9일에 진행
- 6.13 김정일, 북한을 방문하고 있는 중국 공산당 정치국 위원이며 서기처 서기인 조직부장 리위안차오를 단장으로 하는 중국 공산당 대표단을 접견
- 6.13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헌법 제139조와 지방인민위원회들의 결정에 따라 도(직할시), 시(구역), 군인민회의의 대의원 선거를 7.24(일) 실시한다”고 발표
- 6.18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정령, 주독일 북대사 리시홍 임명
- 6.19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결정 제56호(6.18), 도(직할시)·시(구역)·군 인민회의의 대의원선거를 위한 ‘중앙선거지도위’ 조직
- 6.19 김정일이 당사업을 시작(64.6.19)한 것은 “김일성 조선의 100년사에 특기할 역사적 사변”이라고 칭송하며, “강한 민족적 자존심, 자력갱생

- 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해 당의 참된 혁명전사, 애국자가 되어야 한다”고 선동
- 6.23~25 최영림 내각 총리, 김책제철연합기업소 등 함경북·남도 공업부문 사업 현지방문 요해 및 협의회 조직
- 6.23 북한, “과학기술증시는 당이 틀어쥐고 나가는 강성대국 건설의 전략적 노선” 강조 및 “인민생활향상과 2012년 강성국가 건설을 위한 △대고조 진군속도향상, △최첨단 돌파전투쟁” 독려
- 6.24 북한, 채취공업·국토환경보호·철도운수부문과 특히 농업부문에서 장마철 피해방지를 위한 대책사업 ‘역량 집중, 전군중적 전개’ 총력
- 6.25~27 태풍 메아리 영향으로 6.25~6.27 고성 195·통천 171·회양 155mm 측정 및 강풍과 폭우대비 철저한 피해대책 당부
- 6.30 김일일(조선관광총국부원), 작년 방북 관광객이 ‘최고수준에 올랐다’며 상해 ↔ 평양 직항운항(7~10월)과 3국 율환선 관광 시작(4월, 북·중·러) 및 미·유럽 관광객 증가 등 ‘올해 관광객 유치 작년 능력’ 예견
- 7.1 북한 조선중앙통신과 미국 AP통신이 AP통신, 평양지구 개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
- 7.5 북한, 선군정치는 “인민군대를 기둥으로 전반적 사회주의 건설을 추동하는 위력한 정치방식” 강조 및 “수령결사옹위, 당의 두리에 일심단결하여 강성대국 건설을 위한 전군·전민 대고조 진군” 선동
- 7.6 김일성 사망(1994.7.8) 17주기 추모행사
- 7.9 북한, 도·시·군인민회의의 대의원 선거(7.24)를 위한 구·분구 선거위원 회들에서 선거자 명부 공시
- 7.18 북한, 전국 각지에서 도·시·군 인민회의(7.24) 대의원 후보자 추천을 위한 ‘선거자회의’(선거법 해설, 대의원 후보자 추천) 진행
- 7.24 김정일, 정은, 도·시·군 인민회의의 대의원선거장 방문(평양시 제264호 구 제150호분구 선거장) 및 투표행사
- 7.26 북한 내각, ‘환경보호법 시행규정을 채택함’에 대한 결정(4개장 60개조) 발표
- 7.29 유엔 수해조사단 ‘황해도 수인성 전염병 급증’ 발표
- 7.30 평양-서안 국제항로에 의한 중국 관광단, 만경대 방문 및 주체사상탑·평양학생소년궁전·당창건기념탑·개선문·우의탑·관문점 참관과 금강산 유람
- 8.2 지난 6월 태풍과 7월 집중호우로 인해 황해도, 강원도, 함경도 등 각지에서 주택과 농경지를 비롯하여 공공건물, 공장, 도로, 다리, 철길, 제방이 파괴·매몰·침수되어 주민들이 군중적 복구사업 진행
- 8.3 8.3 오후부터 내린 폭우로 “△함남 백금산-돈산역간 돌사태로 열차 운행 중단, △북청군에서 콘크리트 다리 파괴, △개성시에서 105정보의 논 침수 및 180m의 강하천제방 붕괴” 등 피해 발생
- 8.5 7월 하순 폭우로 30여 명 사망·6,480여 동의 살림집 파괴와 1만 5,800

- 여 명의 이재민 발생 및 4만 8,000여 정보의 논과 밭 침수·유실 등 피해현황 종합자료 발표
- 8.9 7월 1일 취항한 평양-상하이 간 항공편을 이용하는 중국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 무비자 관광을 실시
- 8.13 북한 “풍부한 자원은 빠른 경제발전을 담보하는 중요한 전제조건” 강조 및 “세계 각국의 자원 확보 경쟁(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 북극의 자원쟁탈전 등) 심화” 선언
- 8.14 북한 『조평통』 서기국 보도 제979호(8.14), 우리 경찰의 ‘북 해커들의 온라인게임 프로그램 불법해킹 사이버 테러’ 발표를 “용납 못할 도발, 반북 모략소동”이라고 부인 및 비난
- 8.18 북한, 『환경보호법』의 일부 내용들(제3장 제38조~40조, 제4장 제44조, 48조) 수정 보충
- 8.20~26 김정일 방러(8.20~26), 8.24 북·러 정상회담(김정일·메드베데프)
- 8.22~25 북한 ‘제1차 라선국제상품전시회’(윤전기재·의약품·피복제품 등), 8.22~25 개최
- 8.28~9.2 북한, 라선-금강산 시범관광 실시, 8.28 중 연길 출발, 9.2 북 라진항 복귀
- 8.30 김정일의 ‘중국 동북지역 통과와 방문에 관한 ‘상보’ 발표
- 9.8 제17차 태권도선수권대회 개막식, 평양 태권도전당에서 진행
- 9.9 북 정권 창건(1948.9.9) 63주년 경축 ‘노동적위대 열병식’, 김정일·정은 등 참석하 김일성광장에서 진행
- 9.26 북한 조선중앙통신사 보도(9.26), 당대표자회(2010.9.28) 1돌 즈음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성과들을 열거하며 “당의 강화발전과 주체혁명위업수행에서 획기적 전환의 이정표를 마련한 중대 사변”이라고 선언
- 10.12 김정일·정은, 당중앙위·당중앙군사위 주최 ‘당창건 66돌 연회’ 참석
- 10.13 김정일·정은, 조선인민군 제4304군부대와 관하중대 시찰
- 10.15 북한 내각전원회의 확대회의, 최영림(내각총리)·조병주(부총리/보고)·직속기관 책임일꾼 등 참가하 진행(‘3/4분기 인민경제계획수행 정형 총화와 올해 인민경제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생산돌격전을 벌일데 대하여’ 토의)
- 10.21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희천발전소건설기념메달’(희천발전소건설자들의 위훈을 길이 전하기 위함) 제정 결정
- 10.22 김정일·정은, 조선인민군 제985군부대 지휘부 시찰 및 광덕퇴지공장 현지지도
- 10.31 김정일·정은, 조선인민군 제789군부대 시찰
- 11.2 김정일·정은, 공군 연합부대 훈련지도
- 11.3 김정일·정은, 조선인민군 제322군부대 시찰 및 태성기계공장 현지지도
- 11.5 “함남의 불길따라 경공업·인민소비품·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총공격

- 전을 벌여 2012년 김일성 생일 100돌을 최상최대의 명절로 맞이하자”며 ‘전민 대고조 총력투쟁’ 연일 선동
- 11.7 김정일·정은, 조선인민군 공군 제813군부대 및 군부대의 혁명사적지 시찰
- 11.16 북한 노동신문, ‘혁명의 수도 평양시를 더욱 웅장·화려하게 꾸리자’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온 나라가 평양시 새 단장에 물질·인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역설
- 11.23 북한, ‘지진·화산피해방지 및 구조법’ 채택
- 11.25 김정일·정은, 전선서부에 위치한 제233대연합부대 지휘부 시찰
- 11.26 김정일·정은, 오중흡7연대칭호 공군 제1016군부대 시찰
- 11.30 김정일·정은, 조선인민군 제630대연합부대 종합전술훈련 지도 및 조선인민군 제169군부대 관하 중대 시찰
- 12.1 북한 조선중앙통신, 12월 1일부터 중국어 기사·사진·동영상 보도 시작
- 12.3 김정일·정은, 조선인민군 공군 제378군부대 비행훈련 지도
- 12.4 김정일·정은, 빙상취거모범출연(대성산·평양철도국·장철구평양상업대학체육단 선수들 참가) 관람
- 12.4 김정일·정은, 개선청년공원유희장(모란봉구역에 위치) 시찰
- 12.6 김정일·정은, 조선인민군 제35차 군무자예술축전 당선(제762군부대·제966군부대·제630군부대·제337군부대·제233군부대 관하) 중대군인들 공연 관람 및 ‘최고사령관 특별감사’ 전달
- 12.8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정령, ‘황금평·위화도 경제지대법’ 채택 및 ‘라선경제무역지대법’ 수정보충
- 12.9 김정일, 조선인민군 제324대연합부대 예술선전대 공연 관람
- 12.10 김정일, 함경남도의 여러 부문(2.8비날론연합기업소 급수침전지, 용성기계연합기업소 분공장, 신흥산화학공장, 함흥편직공장, 흥남구두공장, 성천강수출품출하사업소, 함흥시 회상지구농장에 새로 건설된 남새온실) 사업 현지지도
- 12.13 김정일·정은, 조선인민군 제966대연합부대 화력타격훈련 지도
- 12.15 김정일·정은, 하나음악정보센터와 광복지구 상업중심 현지지도
- 12.17 12.17, 08:30 현지지도의 길에 중증급성심근경색과 심한 심장성 쇼크 합병으로 열차 안에서 사망
- 12.19 북한, 김정일 사망에 대한 애도를 표하며 “김정은의 영도는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계속 완성해 나갈 수 있게 하는 결정적 담보, 계승자·탁월한·영도자” 등으로 부각
- 12.20 전체 인민군 장병들·노동계급·협동농민·지식인·청년학생들 등 “가장

- 비통하게 애도하고 있다”며 “혁명의 진두에 주체혁명위업의 위대한 계승자, 당과 군대와 인민의 영도자 김정은 동지가 서 있다”고 강조
- 12.20 김정일 영전에 조의표시 의식, 김정은 및 당과 국가·무력기관 책임일꾼 등 참가 하 금수산기념궁전에서 진행
- 12.20 김정은과 국가장외위원회 성원들이 호상을 서고 있는 가운데 금수산기념궁전 ‘김정일 영전’에 북 체류 해외동포들과 주북 각국 외교대표·국제기구대표들 및 무관단이 ‘조의 표시’
- 12.20 “21세기 태양·조선은 김정은의 두리에 뭉친다·김정은 영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나갈 것” 등으로 김정은 우상화 및 충성 다짐
- 12.21 김정일의 생전 경제강국, 인민생활향상 업적 선전 및 “김정은의 영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나갈 것” 등으로 김정은에 대한 충성심 고취 지속
- 12.23 김정은, 김정일의 영구를 다시 찾아 애도 표시
- 12.24 김정은(혁명무력의 최고영도자·경애하는 호칭), 당 중앙군사위와 국방위 성원들·군 주요지휘성원들·군 최고사령부 작전지휘성원들·군 대연합부대 지휘성원들과 김정일 영구에 애도 표시
- 12.24 북한, “우리에게는 주체혁명위업의 위대한 계승자이신 존경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계신다. 그이의 영도를 높이 받들어 내나라, 내 조국을 부강조국으로 만들 것”이라고 강조
- 12.25 김정일이 “생애의 마지막 하루를 앞둔 16일 저녁에도 물고기 공급과 관련한 조치를 취해 주었다”고 선전하며 “김정은 두리에 뭉쳐 강성국가건설” 다짐
- 12.26 김정은(*당·국가·군대의 영명한 영도자로 호칭), 김정일 영구를 다시 찾아 애도 표시
- 12.26 북한, “김정은이 대국상을 당한 첫날부터 나라의 전반사업을 통일적으로 돌보고 있으며, 전국 당조직들이 김정은의 사상과 영도를 일심전력으로 받들고 있다”며 ‘김정은의 유일적 영도체계 확립’ 강조
- 12.27 김정은(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영도자), 김정일 영구에 애도 표시
- 12.28 ‘김정일 영결식’, 금수산기념궁전에서 실황중계
- 12.28 북한, “김정일의 부강조국건설 구상을 실현할 선군청년전위들의 애국적 열의가 높이 발휘되고 있다”며 종합된 자료(사망보도 이후 7일 동안 자료) 소개
- 12.29 김정일 추모 중앙추도대회, 김일성광장에서 진행
- 12.31 북한 당 중앙위 정치국회의, 김정은을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선포와 ‘김정일의 유훈을 받들어 강성국가 건설에서 일대 양양을 일으킬 데’ 대한 결정서 채택과 ‘당 중앙위·당 중앙군사위 공동구호’ 발표

-
- 12.31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정령(12.23) 제2077호, ① 기념주화(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20돌) 발행, ② 기념주화의 그림폴이와 규격, 조성을 승인, ③ 내각과 해당 기관들은 이 정령을 집행하기 위한 실무적 대책을 세울 것
- 12.31 김정은 최고사령관 선포 관련 “김정일 유훈대로 김정은의 영도 밑에 나라의 존엄과 혁명의 붉은기를 끝까지 지켜가려는 염원을 반영한 역사적 사변”이라며 “현대정치가 현대군사가의 자질과 품모를 최상의 높이에서 가장 완벽하게 체현하였다”고 칭송

연구총서

2009-01	북한 비핵화를 위한 한·미 전략적 협력에 관한 연구	전성훈	7,500원
2009-02	세계경제위기와 미·중관계 변화 연구: 북한 핵문제에 미치는 영향	황병덕, 신상진	9,000원
2009-03	북한의 국력 평가 연구	전현준 외	10,000원
2009-04	북한경제의 시장화 실태에 관한 연구	임강택	9,000원
2009-05	21세기 한국의 동아시아국가들과 전략적 협력 강화방안	여인근 외	10,000원
2009-06	북한체제 전환을 위한 전략적 과제와 한국의 동북아 4국 협력전략	배정호 외	10,000원
2009-07	북한 '변화'의 재평가와 대북정책 방향	박형중 외	10,000원
2009-08	북한 개방 유도 전략 목표, 기본방향 및 단계별 과제	최진욱 외	10,000원
2009-09	북한주민 인권의식 고취를 위한 전략적 인권외교의 방향	홍우택 외	6,500원
2009-10	통일대비 북한토지제도 개편방향 연구	허문영 외	9,000원
2009-11	북한인권 침해구조 및 개선전략	이금순, 김수암	7,500원
2009-12	통일대계 탐색연구	조민 외	8,000원
2009-13	Modernization and Opening-Up of North Korean Economy: Roles and Efforts of Neighboring Countries	김규륜 외	7,500원
2009-15	Peace-Keeping on the Korean Peninsula: The Role of Commissions	Gabriel Jonsson	20,000원
2010-01	북한 핵 보유 고수 전략의 도전과 대응	박형중 외	9,500원
2010-02	탈사회주의 경제이행 국가의 권력구조 유형과 개혁 경로: 포스트-김정일 체제에 대한 시사점	최진욱, 김진하	8,000원
2010-03	북한 개방화와 인권개선 방안연구	김국신, 김연수, 서보혁	7,000원
2010-04	북한의 체제위기와 사회갈등	조한범, 양문수, 조대엽	7,500원
2010-05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동북아전략 환경의 변화와 한국의 동북아 4국 통일외교전략	배정호 외	12,500원
2010-06	북한주민 인권의식 실태연구	이금순, 전현준	8,500원
2010-07	라진·선봉지역 물류분야 남북 협력방안 연구	김영윤, 추원서, 임을출	8,000원
2010-08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새로운 접근과 추진방안: 3대 공동체 중심	통일구상	박종철 외 11,500원
2010-09	통일한국의 정치체제	허문영 외	6,000원
2010-10	북한 핵에 대한 억지방향 연구	홍우택	5,000원
2010-11	북한의 포스트 김정일체제 전망	정영태 외	11,000원

2010-12	북한 주민의 의식과 정체성: 자아의 독립, 국가의 그늘, 욕망의 부상	조정아 외	17,000원
2010-13	북·중 경제관계와 남북경협에 대한 파급효과 비교분석	최수영	7,500원
2010-14	East Asian Community Building: Issue Areas and Perspectives of Regional Countries	김규륜 외	10,000원
2010-15(I)	신아시아 외교와 새로운 평화의 모색 I	김규륜 외	13,000원
2010-15(II)	신아시아 외교와 새로운 평화의 모색 II	김규륜 외	13,000원
2011-01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와 북한 핵문제	전성훈	14,500원
2011-02	북한군의 기강 해이에 관한 연구	이교덕 외	11,000원
2011-03	통일 진입과정에서의 북한 재건 방향	최진욱, 김진하	5,500원
2011-04	북한의 부문별 조직실태 및 조직문화 변화 종합연구	정영태	16,000원
2011-05	북한형시재판제도 연구: 특징과 실태	이규창, 정광진	8,000원
2011-06	북한주민의 삶의 질: 실태와 인식	김수암 외	12,000원
2011-07	한반도 평화와 북한 비핵화: 협력적 위협감축(CTR)의 적용방안	박종철 외	10,000원
2011-08	대북한 핵협상 전략구상방향	홍우택 외	6,000원
2011-09	중국의 부상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대응	허문영, 마민호	10,000원
2011-10	북한 핵의 국제정치와 한국의 대북 핵전략	배정호 외	11,000원
2011-11	평화통일을 위한 통일외교 전략	박영호 외	13,500원
2011-12(I)	중국의 G2 부상과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전략 제1부	황병덕 외	15,500원
2011-12(II)	중국의 G2 부상과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전략 제2부	황병덕 외	13,500원
2011-12(III)	중국의 G2 부상과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전략 제3부	황병덕 외	18,000원

학술회의총서

2009-01	북핵 문제 해결 방향과 북한 체제의 변화 전망		6,500원
2009-02	북핵 일괄타결(Grand Bargain)방안 추진방향		5,500원
2010-01	이명박 정부 2년 대북정책 성과 및 향후 추진방향		8,000원
2010-02	독일 통일 20년과 한반도 통일비전		6,000원
2010-03	분단관리에서 통일대비로		5,500원
2010-04	독일 통일 20년과 한국의 통일대비		7,000원
2011-01	한반도 통일비전과 국제협력		4,000원
2011-02	북한인권 실상과 효율적 개입방안		8,500원

협동연구총서

2009-15-01	북한개발지원의 포괄적 추진방안(총괄보고서)	임강택 외	8,500원
2009-15-02	북한개발지원의 이론과 포괄적 전략	박형중 외	10,000원

2009-15-03	북한개발지원의 쟁점과 해결방안	김정수 외	10,000원
2009-15-04	북한개발지원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	장형수 외	10,000원
2009-15-05	북한개발지원체제의 구축방안	이종무 외	9,000원
2009-15-06	지방자치단체의 북한개발지원 전략과 접근방법	양현모 외	10,000원
2009-16-01	복잡계 이론을 통한 북한의 정상국가화 방안 연구(총괄보고서)	김국신 외	6,000원
2009-16-02	북한체제의 행위자와 상호작용	이교덕 외	8,000원
2009-16-03	북한 계획경제의 변화와 시장화	이 석 외	9,000원
2009-16-04	탈냉전 이후 국제관계와 북한의 변화	민병원 외	8,000원
2009-17-01	비핵·개방·3000 구상: 추진전략과 실행계획(총괄보고서)	여인근 외	7,500원
2009-17-02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및 추진환경과 전략	박종철 외	8,000원
2009-17-03	비핵·개방·3000 구상: 한반도 비핵화 실천방안	조 민 외	9,000원
2009-17-04	비핵·개방·3000 구상: 북한의 개방화 추진방안	함택영 외	7,500원
2009-17-05	비핵·개방·3000 구상: 남북경제공동체 형성방안	조명철 외	7,000원
2009-17-06	비핵·개방·3000 구상: 행복공동체 형성방안	이금순 외	7,500원
2010-14-01	북한정보체계 실태조사(총괄보고서)	황병덕 외	12,000원
2010-14-02	북한정보체계 실태조사(上)	황병덕 외	14,000원
2010-14-03	북한정보체계 실태조사(下)	황병덕 외	13,000원
2010-15-01	이명박 정부 외교안보통일정책의 세부 실천방안 (총괄보고서)	여인근 외	9,000원
2010-15-02	이명박 정부 외교안보통일정책의 추진환경 및 전략과 실천방안	박영호 외	9,500원
2010-15-03	이명박 정부 대북통일정책의 세부실천방안	허문영 외	7,000원
2010-15-04	이명박 정부 외교정책의 세부실천방안(1): 협력 네트워크 외교 분야	남궁영 외	7,500원
2010-15-05	이명박 정부 외교정책의 세부 실천방안(2): 포괄적 실리외교 분야	전재성 외	9,500원
2010-15-06	이명박 정부 안보정책의 세부 실천방안	이수훈 외	7,500원
2010-16-01	북한의 정상국가화 지원방안 연구(총괄보고서)	이교덕 외	7,000원
2010-16-02	북한의 정치부문 정상국가화 지원방안	전현준 외	7,500원
2010-16-03	북한 시장 진화에 관한 복잡계 시뮬레이션	조정아 외	14,000원
2010-16-04	북한의 정상국가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방안	민병원 외	7,500원
2011-14-01	북한정보관리체계 개선방안(총괄보고서)	황병덕 외	14,500원
2011-14-02	북한정보관리체계 개선방안(상)	황병덕 외	13,000원
2011-14-03	북한정보관리체계 개선방안(중)	황병덕 외	12,000원
2011-14-04	북한정보관리체계 개선방안(하)	황병덕 외	13,500원
2011-15-01	북한 경제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프로그램 연구: 국제사회의 경험 분석(총괄보고서)	임강택 외	10,000원
2011-15-02	부패의 개념과 실태 및 반부패 개혁	박형중 외	10,000원
2011-15-03	체제전환국의 시장·민주제도 건설 지원	박영호 외	13,000원
2011-15-04	국제사회의 개발지원전략과 협력체계 연구	장형수 외	9,500원
2011-15-05	수원국의 역량발전을 위한 개발협력전략과 사례연구	이종무 외	9,500원
2011-15-06	인프라 개발을 위한 국제협력 사례와 시사점	이상준 외	9,000원

논총

통일정책연구, 제18권 1호 (2009)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8, No. 1 (2009)	2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8권 2호 (2009)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8, No. 2 (2009)	2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9권 1호 (2010)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9, No. 1 (2010)	2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9권 2호 (2010)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9, No. 2 (2010)	2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0권 1호 (2011)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0, No. 1 (2011)	2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0권 2호 (2011)	10,000원

북한인권백서

북한인권백서 2009	이금순 외	1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9</i>	이금순 외	20,000원
북한인권백서 2010	박영호 외	2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0</i>	박영호 외	20,000원
북한인권백서 2011	김국신 외	17,5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1</i>	김국신 외	17,500원

기타

2009 Lee Myung-bak Government's North Korea Policy	Suh, Jae-Jean	5,500원
2009 김정일 현지지도 동향 1994-2008		15,000원
2009 The U.S.-ROK Alliance in the 21st Century	Bae, Jung-Ho, Abraham Denmark	10,000원
2009 북한의 주요현안과 한·미 전략적 공조	배정호	10,000원
2009 오바마 행정부의 출범에 따른 미·중관계의 변화와 한반도	배정호	10,000원
2010 김정일 현지지도 동향 1994-2009		15,000원
2010 2010 독일통일백서		13,000원
2010 21세기 러시아의 국가전략과 한·러 전략적 동반자관계		10,500원
2010 Russian National Strategy and R.O.K.-Russian Strategic Partnership in the 21st Century		13,500원
2010 NPT 체제와 핵안보		13,000원

2010 Nuclear Security 2012: Challenges of Proliferation and Implication for the Korean Peninsula		15,000원
2010 통일 환경 평가(통일대계 연구 2010-01)	박종철 외	18,000원
2010 통일비전 개발(통일대계 연구 2010-02)	조민 외	12,000원
2010 독일의 평화통일과 통일독일 20년 발전상(통일대계 연구 2010-03)	황병덕 외	16,000원
2010 사회주의 체제전환 이후 발전상과 한반도통일-중국, 베트남 및 중동부 유럽 국가들의 사회주의 체제전환 중심(통일대계 연구 2010-04)	황병덕 외	15,000원
2010 전환기의 북한과 통일담론(통일대계 연구 2010-05)	배정호 편저	11,000원
2010 한반도 통일과 주변 4국(통일대계 연구 2010-06)	최진욱 편저	11,000원
2010 Korean Unification and the Neighboring Powers(통일대계 연구 2010-07)	최진욱 편저	13,000원
2011 통일대비를 위한 북한변화 전략(통일대계연구 2011-01-1)	박형중 외	17,000원
2011 북한변화를 위한 한·중 협력방안(통일대계연구 2011-01-2)	임강택 외	6,500원
2011 남북 친화력 확대 방안(통일대계연구 2011-02)	조민 외	6,000원
2011 통일대비를 위한 국내과제(통일대계연구 2011-03)	박종철 외	13,000원
2011 통일외교 과제와 전략(통일대계연구 2011-04)	최진욱 외	13,000원
2011 US-China Relations and Korean Unification(Grand Plan for Korean Unification 2011-05)	최진욱 편저	12,000원
2011 통일 비용·편익 연구의 새로운 접근: 포괄적 연구요소의 도입과 대안의 모색 (통일 비용·편익 종합연구 11-01)	김규륜 외	19,000원
2011 체제전환 비용·편익 사례연구(통일 비용·편익 종합연구 11-02)	조한범 외	10,500원
2011 통일 비용·편익 추계를 위한 북한 공식경제부문의 실태연구 (통일 비용·편익 종합연구 11-03)	임강택 외	9,500원
2011 2011년 통일예측시계구축	박영호, 김형기	7,500원
2011 한반도 통일과 동북아 4국의 입장과 역할	배정호 외	6,500원
2011 Korean Unification and the Positions and Roles of the Four Neighboring Powers	배정호 편	8,500원
2011 중국의 부상에 따른 동북아 전략환경의 변화와 한반도	배정호 편	12,000원
2011 2011 Unification Clock: When will We See a Unified Korea?	Park Young-Ho, Kim Hyeong Ki	4,000원
2011 알기쉬운 통일교육 12주제	허문영 외	15,000원

연례정세보고서

2009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09~2010	7,000원
2010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10~2011	7,000원
2011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11~2012	6,000원

통일정세분석

비매품

2008-12	한-러 정상회담 결과분석	여인곤
2009-01	2009년 북한 신년 공동사설 분석 최진욱, 전현준, 정영태, 조정아, 최수영, 박영호, 박형중	
2009-02	하반기('08년 7월~12월) 북한의 정세 분석 최진욱, 임순희, 전현준, 정영태, 조정아, 최수영	
2009-03	북한의 대남 비방 공세의 의도와 전망 최진욱, 전현준, 정영태	
2009-04	북한의 제12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결과 분석	전현준
2009-05	2008년 북-중무역의 주요 특징	임강택, 박형중
2009-06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1차 회의 결과 분석	최수영, 정영태
2009-07	한-미 정상회담 결과분석	김국신
2010-01	2010년 북한 신년 공동사설 분석	임강택 외
2010-02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2차 회의 결과 분석	최수영
2010-03	김정일 방중과 중국의 전략외교	배정호, 박영호, 전병곤
2010-04	2010상반기 북한정세 분석 보고서 정영태, 이교덕, 최수영, 임순희, 조정아	
2010-05	독일통일 20주년 조망: 독일통일이 한반도 통일에 주는 시사점	황병덕
2010-06	야로슬라블 한-러 정상회담 결과 분석	여인곤
2010-07	북한 3대 세습 후계구도 분석 및 정책변화 전망	김진하
2011-01	2011년 북한 신년 공동사설 분석	최진욱 외
2011-02	미-중 정상회담의 의미와 한국의 전략적 고려사항	배정호 외
2011-03	2011년 미-중 정상회담 평가: 동북아 및 한반도에의 함의	황병덕 외
2011-04	2009년 헌법 개정 이후 북한 노동법제 동향	이규창
2011-05	최근 북한 주민의 의식변화와 정책적 시사점	임순희
2011-06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4차 회의 결과 분석	임강택, 최진욱
2011-07	중동 민주화 혁명과 한반도 전략적 함의	배정호, 박영호, 박재적, 이기현
2011-08	북한의 여성권·아동권 관련 법 제정 동향	임순희, 김수암, 이규창
2011-09	상반기 북한정세 분석 보고서	최진욱 외
2012-01	2012년 북한 신년 공동사설 분석	최진욱 외

KINU정책연구시리즈

비매품

2009-01	신평화구상 실현을 위한 전략과 과제	김규륜 외
2009-02(I)	접경지역의 평화지대 조성을 통한 남북교류 활성화 방안(I): 접경지역 평화적 이용을 위한 이론적 검토와 사례연구	손기웅 외
2009-02(II)	접경지역의 평화지대 조성을 통한 남북교류 활성화 방안(II): 접경지역 평화적 이용을 위한 기존제안 검토	손기웅 외
2009-03	대북정책의 대국민 확산방안	조한범 외
2009-04	통일 예측 시계 구축	박영호, 김지희

2009-05	북핵일지 1955-2009	조 민, 김진하
2009-06	미국 대북방송 연구: 운용실태 및 전략을 중심으로	이원웅
2010-01	한반도 녹색성장을 위한 남북한 산림협력 법제 개선방안 예비연구	이규창
2010-02	2010년 통일예측서계	박영호 외
2010-03	북한 경제개발계획 수립방안 연구: 베트남 사례를 중심으로	임강택 외
2010-04(III)	접경지역의 평화지대 조성을 통한 남북교류 활성화 방안(III): 정책제안	손기웅 외
2010-04(IV)	접경지역의 평화지대 조성을 통한 남북교류 활성화 방안(IV): 2010년 「코리아 접경포럼」 자료집	손기웅 외
2011-01	재스민혁명의 분석과 북한에 대한 시사점	박종철 외
2011-02	창지투(長吉圖) 선도구와 북한나선특별시, 러시아 극동지역 간 경제협력 과제	림금숙
2011-03	6자회담과 남북관계: 전망과 대책	박종철 외
2011-04	보호책임(R2P)의 이론 및 실행, 그리고 한반도에서의 함의: 리비아 및 코트디부아르 사태를 중심으로	조정현
2011-05	남북러 가스관 사업의 효과, 쟁점, 과제	이운식
2011-06	DMZ 총람: 개요, 정치·군사적 현황	손기웅 외
2011-07	DMZ 평화적 이용의 국가적 의미	손기웅 외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비매출

2009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4권 1호	박영호, 이금순, 김수암, 홍우택
2009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4권 2호	박영호, 이금순, 김수암, 홍우택
2010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5권 1호	김국신, 김영윤, 전현준, 이금순, 이규창
2010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5권 2호	김국신, 전현준, 이금순, 이규창
2011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6권 1호	김수암, 전현준, 이규창
2011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6권 2호	김수암, 김국신, 이규창

월간 북한동향

비매출

2008	월간 북한동향 제2권 제1호	북한연구실
2008	월간 북한동향 제2권 제2호	북한연구실
2008	월간 북한동향 제2권 제3호	북한연구실
2008	월간 북한동향 제2권 제4호	북한연구실
2008	월간 북한동향 제2권 제5호	북한연구실
2008	월간 북한동향 제2권 제6호	북한연구실
2009	월간 북한동향 제3권 제1호	북한연구센터
2009	월간 북한동향 제3권 제2호	북한연구센터
2009	월간 북한동향 제3권 제3호	북한연구센터
2009	월간 북한동향 제3권 제4호	북한연구센터

2009 월간 북한동향 제3권 제5호	북한연구센터
2009 월간 북한동향 제3권 제6호	북한연구센터
2010 월간 북한동향 제4권 제1호	북한연구센터
2010 월간 북한동향 제4권 제2호	북한연구센터
2010 월간 북한동향 제4권 제3호	북한연구센터
2010 월간 북한동향 제4권 제4호	북한연구센터
2010 월간 북한동향 제4권 제5호	북한연구센터

Studies Series

비매품

- 2009-01 The Evaluation of Regime Stability in North Korea: Scenario Workshop
Choi Jin Wook, Kim Kook Shin, Park Hyeong Jung, Cheon Hyun Joon
Cho Jeong Ah, Cha Moon Seok, Hyun Sung Il
- 2009-02 Developing Inter-Korean Economic Relations for the 'Advancement of the Korean Peninsula'
Lim Kang Teag, Kim Kyu Ryoan, Jang Hyung Soo
Cho Han Bum, Choi Tae Uk
- 2009-03 The Everyday Lives of North Koreans
Cho Jeong Ah, Suh Jae Jean, Lim Soon Hee, Kim Bo Geun, Park Young Ja
- 2009-04 North Korea's Regime Maintenance Policy Since the Kim Jong-il Regime and Prospects for Change
Cheon Hyun Joon, Jeung Young Tae, Choi Soo Young, Lee Ki Dong
- 2010-01 Strategy for Encouraging North Korean Opening: Basic Direction and Sequential Tasks
Choi Jin Wook, Lee Kyo Duk, Cho Jeong Ah, Lee Jin Yeong, Cha Moon Seok
- 2010-02 Unification Clock: Predicting Korean Unification
Park Young Ho
- 2011-01 A New Approach to the National Community Unification Formula
Park Jong Chul, Hong Woo Taek, Lee Kyu Chang, Kim Philo, Chun Chae Sung,
Cho Seong Ryoul, Hong Ilk Pyo, Hwang Sun Hye

기타

- 2010 2010 Unification Clock: When Will We see a Unified Korea
Park Young Ho
- 2010 In Search of New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Kim Kyu-Ryoan

■■ 통일연구원 회원가입 안내

통일연구원은 민족공동체 실현을 위한 국민 역량을 축적하고 통일환경 변화에 적극적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통일문제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전문적,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본원의 연구성과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보다 많은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고자 연간 회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회원에게는 간행물을 우편으로 우송해 드리며 각종 학술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혜택을 드립니다.

1. 회원 구분

- 가) 학생회원: 대학 및 대학원생
- 나) 일반회원: 학계나 사회기관소속 연구종사자
- 다) 기관회원: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2. 가입방법

- 가) 「회원 가입신청서」 작성
- 나) 신한은행 140-002-389681(예금주: 통일연구원)으로 계좌입금
- 다) 연회비: 학생회원 7만원, 일반회원 10만원, 기관회원 20만원

3. 회원 특전

- 가)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 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
- 나) 연구원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인 『통일정책연구』,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단행본 시리즈인 연구총서, 학술회의 총서, 협동연구총서, 통일정세분석 등 우송
- 다) 도서관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
- 라) 구간자료 20% 할인된 가격에 구입

4. 회원가입 문의

- 가) 주소: (142-728) 서울시 강북구 한천로 1307(수유동)
학술정보센터 출판정보관리팀 도서회원 담당자(pcm@kinu)
- 나) 전화: (02)901-2559, FAX: (02)901-2547
- 다)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 가입기간 중 주소변경시에는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가입신청서				
성 명		입금자 (입금일자)	-	
근 무 처				
	직 위			
간 행 물 받을 주소	(우편번호 :)			
연 락 처	전 화		내 선 전 화	
	핸드폰		FAX	
	전자메일			
전 공 및 관심분야				
회원구분	학생회원 () 일반회원 () 기관회원 ()			
본인은 통일연구원의 연회원 가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 본 신청서를 보내주십시오.
 (우142-728) 서울시 강북구 한천로 1307(수유동) 통일연구원 통일학술정보센터
 전화: (02)901-2559, FAX: (02)901-2547 E-Mail: pcm@kinu.or.kr

※ 신한은행 온라인 140-002-389681 (예금주: 통일연구원)

| 연례정세보고서 2011 |

통일환경 및 남북한관계 전망:
2011~2012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